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Goyang City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수준 향상 방안 연구

전 성 훈
이 보 라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Goyang City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수준 향상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전성훈(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보라(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원)

발 행 일 2022년 10월 31일

저 자 전성훈, 이보라

발 행 인 정원호

발 행 처 고양시정연구원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 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1726-68-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 | |
|---|-----------|
| 요약 | i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
| 제2절 연구 목적 | 5 |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7 |
|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9 |
| 제2장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7 |
| 제1절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 13 |
| 제2절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 | 18 |
| 제3장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수준 분석 | 25 |
| 제1절 조사 설계 | 27 |
|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 31 |
| 제3절 다문화수용성 분석 결과 | 34 |
| 제4절 소결 | 53 |
| 제4장 국내외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사례 분석 | 55 |
| 제1절 사례 분석 체계 | 57 |
| 제2절 국내의 다문화수용성 정책 분석 | 59 |
| 제3절 외국의 다문화수용성 정책 분석 | 87 |

| | |
|---------------|----|
| 제4절 시사점 | 95 |
|---------------|----|

| | |
|-----------------------------------|-----------|
| 제5장 결론: 다문화수용성 향상 방안 | 99 |
|-----------------------------------|-----------|

| | |
|---------------------|-----|
| 제1절 제도적 개선 방안 | 101 |
|---------------------|-----|

| | |
|---------------------|-----|
|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 103 |
|---------------------|-----|

| | |
|-------------------|------------|
| 참고문헌 | 105 |
|-------------------|------------|

| | |
|-----------------|------------|
| 부록 | 111 |
|-----------------|------------|

| | |
|-----------------------|------------|
| Abstract | 123 |
|-----------------------|------------|

표 목차

| | |
|---|----|
| [표 1-1] 다문화수용성 조사 관련 유사 연구 | 7 |
| [표 1-2] 연구 방법의 주요 내용 | 9 |
| [표 2-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특성 비교 | 14 |
| [표 2-2] 다문화수용성 측정 관련 연구 | 21 |
| [표 2-3]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의 주요 내용 | 23 |
| [표 2-4]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지수(KMAI)의 의 주요 내용 | 23 |
| [표 3-1]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 구성 체계 | 28 |
| [표 3-2]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원점수 채점표 | 28 |
| [표 3-3] 실증조사 체계 | 30 |
| [표 3-4] 설문조사 주요 내용 | 31 |
| [표 3-5]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고양시민) | 34 |
| [표 3-6]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고양시 공무원) | 36 |
| [표 3-7]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 37 |
| [표 3-8] 다양성 차원의 세부 질문체계 | 38 |
| [표 3-9] 다양성 차원의 분석 결과 | 40 |
| [표 3-10] 관계성 차원의 세부 질문체계 | 41 |
| [표 3-11] 관계성 차원의 분석 결과 | 42 |
| [표 3-12] 보편성 차원의 세부 질문체계 | 44 |
| [표 3-13] 보편성 차원의 분석 결과 | 45 |
| [표 3-14] 다문화수용성 수준 비교분석 종합 | 48 |
| [표 3-15] 기타 일반사항의 세부 질문체계 | 50 |
| [표 3-16]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 분석 결과 | 51 |
| [표 3-17] 다문화수용성 증대 정책 필요성 분석 결과 | 52 |
| [표 4-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61 |

| | |
|---|----|
| [표 4-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63 |
| [표 4-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64 |
| [표 4-4]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67 |
| [표 4-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71 |
| [표 4-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수용성 정책 및 사업 | 73 |
| [표 4-7]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에서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75 |
| [표 4-8] 안산시 다문화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 77 |
| [표 4-9] 국가별 공동체 행사 및 축제 개최 현황(2018~2019) | 78 |
| [표 4-10]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현황(2018~2019) | 79 |
| [표 4-11] 국가별 문화 축제 개최 현황(2018~2019) | 80 |
| [표 4-12] 다양한 문화 이해 교육 운영 현황(2018~2019) | 81 |
| [표 4-13]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사업 | 83 |
| [표 4-14]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역점과제별 세부추진사업 | 85 |
| [표 4-15] 캐나다 다문화수용성 정책 | 91 |
| [표 4-16] 독일 다문화수용성 정책 | 94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 목적 | 6 |
| [그림 1-2] 연구 체계도 | 10 |
| [그림 4-1] 비교분석의 준거틀 | 58 |
| [그림 4-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60 |
| [그림 4-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66 |
| [그림 4-4]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70 |
| [그림 4-5]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74 |
| [그림 4-6]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82 |
| [그림 4-7] 「수원시 외국인주민지원 세부추진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84 |
| [그림 4-8] 캐나다 지역이민협의체(LIPs) 조직 구성 | 89 |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으로 이민정책 및 다문화정책 추진

- 법무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상생·통합·안전·인권·협력을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5대 정책목표, 13대 중점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현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민 문호개방 정책을 반영하였고,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임
-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 강화를 세부정책에 포함시켜 시행중에 있음

○ 높은 실업률 등에 따른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내 여건이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민자를 취업경쟁자로 인식하여 반이민정서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왜곡된 정보(치안 및 생활환경 등)로 인해 재한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뿐만 아니라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국민 역차별 논란도 발생되고 있으며,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이민자 가족결합 등으로 인한 2차 이민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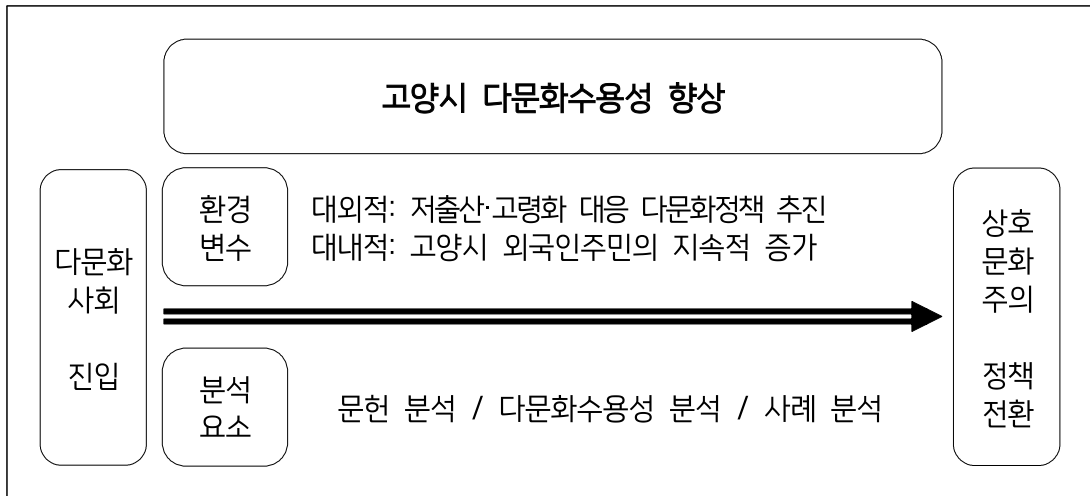
○ 고양시의 법적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수립·시행

-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2020년 7월 일부 개정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9년과 2020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향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상생적·호혜적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다시 말해 현행 제도적 규정과 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체계 등에서 주요 정책 수혜자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만 설계되어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인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족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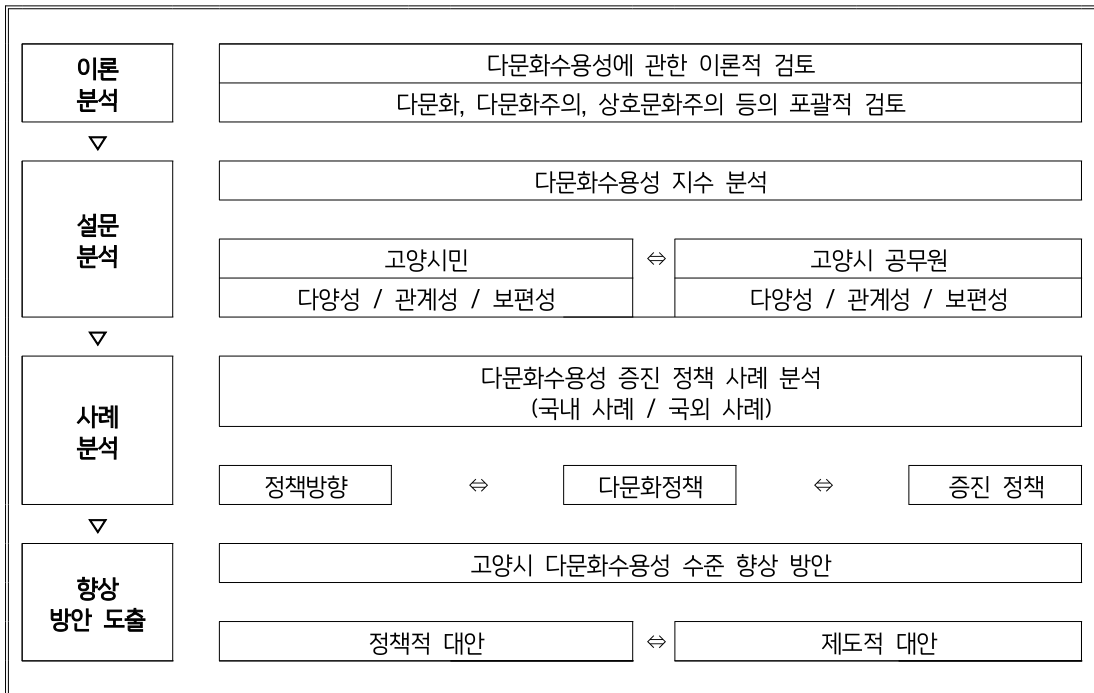
○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 및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이와 같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양시의 각종 정책이 그들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자립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외국인주민의 문화적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고양시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요 구성원 역할을 부여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지원이 그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상생적·포용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현행 협의적인 정책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와 측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체계



3. 정책 제언

□ 제도적 개선 방안

- 단기적으로 고양시의 다문화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선언적 의미로서 ‘고양시민의 책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상호문화주의는 주류집단 또는 지배문화구성원으로 표현되는 원주민이 이민문화의 인정을 넘어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본 전제로 함
 - 따라서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 가능한 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양시민의 책무를 이 조례에 규정하여 고양시민이 외국인주민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책무 또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인주민의 이와 같은 노력과 연계되어야만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과 의지를 선언적 의미로서 이 조례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고양시의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조례는 다문화사회의 일부 구성원만을 정책 대상으로 상정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나 향후 정책 대상자를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상생적 다문화사회 구현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규정한 제도로 개정이 요청됨
- 둘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와 제5조의2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수용성 증진 대상자인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 문화 적응 대상자인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교육과 홍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기회 제공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가해야 함
- 마지막으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와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주요 정책 수혜자(외국인주민과 고양시민, 고양시 공무원) 중심으로 확장하고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조사 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양시의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단초로 활용해야 함

□ 정책적 개선 방안

- 먼저 고양시민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수적임
- 현행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에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 있으며, 고양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계획’을 비롯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기본계획’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그와 더불어 이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궁극적인 다문화사회의 구현이라 한다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

민자치회의 다문화수용성은 반드시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의무교육과정에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이해 교육의 포함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외국인주민의 문화적응 수준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양시민과 외국인주민 간의 접촉을 통한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문화예술정책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연계는 소수자 편견을 줄이고, 국가적·지역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고양시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에 다문화사회 구현 또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상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의 극대화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 무엇보다 중요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주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주 지역 공동체의 인정은 양호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거주지역 또는 주요 활동지역(행정동 단위)에서 외국인주민이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와 사업적 연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다문화사회 관련 활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그와 더불어 외국인주민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동의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부여하여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제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08년을 시작으로 5년간 중·장기적 국내 이민정책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으며, 2022년 현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부 과제가 추진 중이다. 해당 기본계획은 “국민 공감!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상생·통합·안전·인권·협력을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5대 정책 목표, 13대 중점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민 문호 개방 정책을 반영하였고,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 추진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 강화를 세부 정책에 포함시켜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 자립지원패키지’ 확대와 다문화 부모학교 신설, 실용적 한국어 교육으로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합지원 프로그램 확충으로 사회통합과 역량 개발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내 여건이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이민자를 취업경쟁자로 인식하여 반이민 정서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왜곡된 정보(치안, 생활환경 등)의 영향으로 재한외국인에게 편견을 갖는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이민자 대상의 시혜적 지원으로 국민 역차별 논란도 발생되고 있으며,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와 이민자 가족 결합 등에 따른 2차 이민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고양시 관내 외국인주민 수는 연도별로 소폭 등락이 존재하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21,350

명에서 2020년 24,651명으로 15.5%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고양시 인구수와 비교하면 2015년 2.1%(1,027,546명)에서 2020년 2.4%(1,045,497명)로 외국인주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2020년 7월 일부개정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9년과 2020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향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상생적·호혜적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현행 제도적 규정과 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체계 등에서 주요 정책 수혜자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만 설계되어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인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양시의 각종 정책이 그들의 온전한 정착을 위한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외국인주민의 문화 적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고양시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요 구성원 역할을 부여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지원이 그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생적·포용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현행 협의적인 정책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와 측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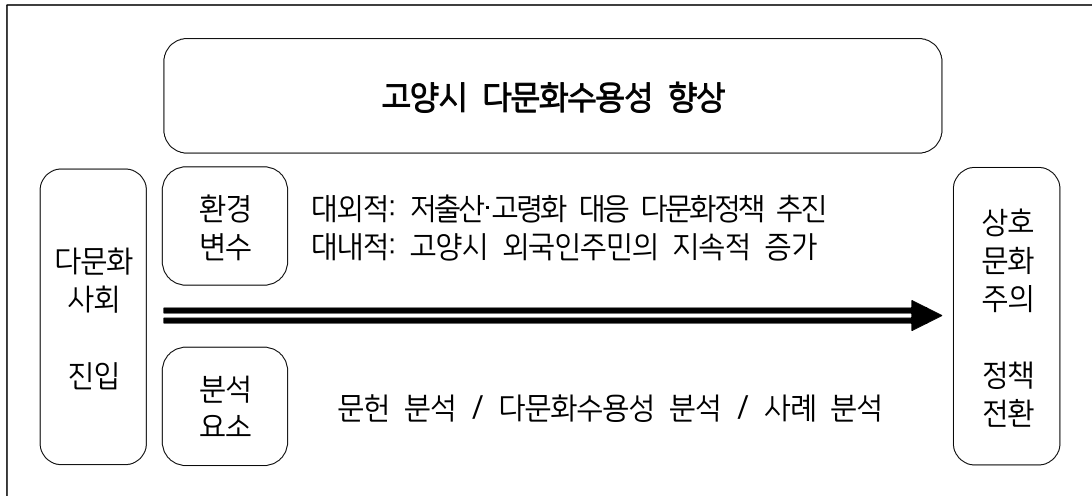
첫째,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이 필수적이다.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별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여 향후 관련 세부 정책 개발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양시민과 더불어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 또한 필수적이다. 일반행정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고양시 공무원 중 외국인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하위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고, 고양시민과 비교를 통해 현재 고양시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양시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국 기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비교분석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와 언급한 다문화수용성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관련 정책 개발에 근거로 활용코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수용성 조사와 국내외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세부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부 정책은 정책적 대안과 제도적 대안으로 구분하되, 대상별로 구체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1-1] 연구목적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다문화수용성 관련 유사·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중 후자는 제2장 제2절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유사·선행연구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는 그 대상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대분되고, 학술적 연구보다는 주로 정책적 연구로 이루어져 왔으며,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2015년과 2018년,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측정 도구가 활용되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고양시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없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연구가 부재하다는 것과 지역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수용성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생적·포용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1] 다문화수용성 조사 관련 유사연구

| 연도 | 연구자 | 연구명 |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
| 2022 | 김이선 외 |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다문화수용성 연구 동향 ■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 ■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 ■ 다문화 관련 국제비교 ■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 제시 |

| 연도 | 연구자 | 연구명 | 연구 방법 | 주요 연구 내용 |
|------|-------|---------------------|---|---|
| 2020 | 황나리 | 경기도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통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수용성 및 진단 도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경기도민 및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분석 ■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분석 ■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 |
| 2018 | 김이선 외 |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수용성 개념 및 선행연구 특성 파악 ■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 검토 ■ 다문화수용성 측정 지표 개발 ■ 일반국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 ■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 제시 |
| 2018 | 배옥현 | 경상북도 다문화수용성 실태조사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수용성 관련 이론적 논의 ■ 중앙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분석 ■ 경북도민 다문화수용성 수준 분석 ■ 다문화수용성 지원방안 |
| 2015 | 안상수 외 |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수용성 관련 개념 및 진단 도구 설정 ■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 검토 ■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 분석 ■ 일반국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 ■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 제시 |

제4절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연구 내용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포괄적 이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상호문화주의로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도출하였고, 여성가족부의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을 통해 고양시의 다문화수용성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과 관련한 국내 사례(중앙정부,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와 국외 사례(캐나다, 독일)를 비교·분석하여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수용성 측정지표와 개발된 조사문항, 수용성 증진 방안 등에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를 활용하여 다문화수용성 지수의 타당성과 정책대안의 합리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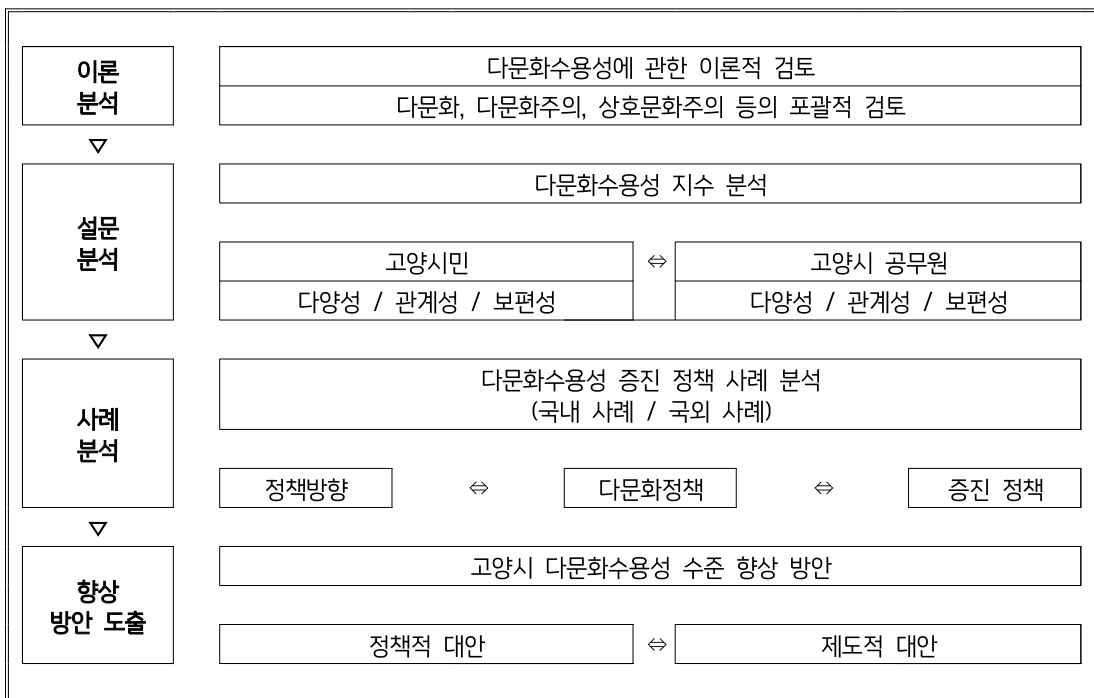
[표 1-2] 연구 방법의 주요 내용

| 구분 | 연구 방법 | 주요 내용 |
|-------------------------|-----------------------|---|
| 제1장 서론 | - | - |
| 제2장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문헌연구 | ▣ 다문화와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포괄적 문헌검토 |
| 제3장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수준 분석 | ▣ 설문조사 | ▣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를 적용하여 고양시민과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도출 ▣ 여성가족부의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
| 제4장 국내외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분석 | ▣ 사례 분석 ▣ 전문가에게 자문 | ▣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를 비롯하여 캐나다, 독일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 |

| 구분 | 연구 방법 | 주요 내용 |
|------------------|----------|--|
| | | 책의 포괄적 분석 검토 |
| 제5장 다문화수용성 향상 방안 | ▣ 전문가 자문 | ▣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 제시 |
| 제6장 결론 | - | - |

전술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과 내용 등을 토대로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과 향상 방안의 분석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 체계도



제 2 장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제2절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

제1절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인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 두 가지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와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문화(multicultural)는 두 개 이상의 생활양식이 하나의 지역 또는 사회에 공존하는 것으로 단일문화(單一文化)와 대비되는 개념이다(전성훈·오은지, 2019). 즉, 다문화는 상이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여러 문화집단이 하나의 공동체에 함께 존재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를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 칭한다(전성훈·유수동, 2021).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를 인구현상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Kymlicka(1995)는 다문화사회를 다민족(multinational)사회와 다인종(polythnique)사회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여러 가지 문화적 실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주류화되는 다수의 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소수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이고, 후자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존의 인종과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석주·박지영(2012)은 구성원 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를 다문화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사회는 근본적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이 아닌 국가 또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박진경, 2010).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 다문화에 따라 파생된 결과가 다문화사회라면, 그 대응정책과 다문화 인정의 사고방식을 다문화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지향점의 바탕이 되는 이념적 도구 중 하나이다(전성훈·오은지, 2019; 전성훈·유수동, 2021).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1960년대 소외된 집단의 문화적 권리 인정을 요구하는 시민권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공식적인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이후 유럽 국가로 전파되었다(오경석, 2007; 김상민 외, 2017).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이전에 통용된 인종 정책인 동화주의(同化主義, assimilationism)¹⁾ 또는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 cultural relativism)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기존의 문화에 새롭게 유입된 소수 이민 문화와 관련되어 많이 활용되어 왔다.

다문화주의의 정의는 이를 연구한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협의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주체의 요구를 정치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보유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적 권리에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김유경 외, 2008).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는 산업화 이후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적 가치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 소수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발전되었다(전성훈·오은지, 2019).

[표 2-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특성 비교

| 구 분 | 동화주의 | 다문화주의 |
|---------------|--|--|
| 기본논리 | ▣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 | ▣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존을 지원하는 적극적 조치 등 우대조치 |
| 정책목표 | ▣ 소수집단의 주류사회로 동화 | ▣ 소수집단의 고유성 인정을 통한 사회통합 |
| 정체성 | ▣ 동질화 | ▣ 이질화 |
| 국적부여 | ▣ 속지주의 ▣ 용이한 조건 | ▣ 속지주의 ▣ 이중국적 허용 |
| 정주화 | ▣ 비교적 가능 | ▣ 가능 |
| 국가역할 | ▣ 제한적 지원 | ▣ 적극적 지원 |
| 이주민에 대한 관점 | ▣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 노동력, 이방인 ▣ 통합의 대상 | ▣ 상호존중과 관용 ▣ 사회구성원 ▣ 사회 다양성의 원천 |
| 평등개념 | ▣ 기회의 평등 | ▣ 결과의 평등 |
| 갈등해소 방안 | ▣ 완전한 동화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 ▣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
| 정책수단 | ▣ 소수집단 차별 방지의 법제화(소극적) | ▣ 소수집단 문화와 권리 보호의 법제화(적극적) |

1) 동화주의는 강한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문화주의를 칭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이 국민됨을 전제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으로 정의됨(정장엽·정순관, 2014)

| 구 분 | 동화주의 | 다문화주의 |
|--------|---|--|
| 문화적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동질화 추구 추상적인 타 문화 이해와 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이질성 존중 구체적인 타 문화 인정과 보호 |
| 다양성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공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
| 비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의 현실적 어려움 이주민의 현실적인 사회적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정체성 약화 사회적 분열 초래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로 이주민 차별성 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류 공존과 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 |

자료: 박진경·원숙연,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당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2010.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8.

한편 이론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 Taylor(1994)와 Vertovec(1996)는 다문화주의를 각각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 ‘모자이크(mosaic)와 샐러드 볼(salad bowl)’에 빗대어 정의하였다. 여기서 ‘인정의 정치’는 다수집단이 다른 집단에 권리침해를 받지 않는 소수집단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소수집단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자이크’는 주류집단의 단일문화를 배경으로 여러 소수집단의 문화가 박혀 있는 현상이며, ‘샐러드 볼’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하나의 사회에 섞여 공존하며 각각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샐러드’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문화주의는 주류든 비주류든 다양한 문화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신뢰를 지향하나, 현실적으로 주류집단이 비주류집단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비주류집단은 주류집단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전성훈·오은지, 2019).

이처럼 인정과 배려의 정치로 상징되는 다문화주의는 1990년대 후반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상호문화주의(相互文化主義, interculturalism)이다. 그 당시 다문화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오히려 소수 문화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거나,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고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했다는 것이다(김창근, 2015). 다시 말해 타문화의 인정과 존중이 아닌 무관심에 가까워 이에 따라 소수 또는 하위 문화가 다수 또는 지배 문화로 흡수되며, 그들이 소외되는 정치적 상황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정현, 2017).

이처럼 다문화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상호문화주의는 ‘다름의 인정과

공존'을 넘어 다른 문화 사이에서 관계성에 기반한 '상호 열린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공유 가능한 문화를 창출하려는 이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창근, 2015).

1990년대 이후 상호문화주의와 관련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Parekh(2000)는 기존 다문화주의의 확장을 통한 상호적 다문화주의(interactive multiculturalism)를 제시하면서 여러 문화의 병렬적 수용의 단계를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의 문화를 형성해 가는 통합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Brah(1996)는 'Cartographies of diaspora(이주 공간의 지도제작법)'에서 상호적 관계에서의 이주 공간과 정체성에 주목하였고, 이주 공간에서 이주민과 원주민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원주민이 이주자가 되고 이주자가 원주민이 되는 공간'으로 보았다. 또한 정체성의 동질성이나 이질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재구성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한 사람은 여러 정체성을 동시에 소유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이 기존의 정체성을 대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Brah, 1996; 김태원, 2012).

이와 함께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인 Sen(2006)은 'Identity and Violence(정체성과 폭력)'에서 문명, 종교, 국가, 인종 등 다양한 정체성이 '단일의 소속'이라는 가정을 비판하면서, 선택과 자유, 공동 시민적 정체성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정체성의 동질성과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en, 2006; 김태원, 2012; 김창근, 2015).

같은 시각에서 한건수(2012)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는 선진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며,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온정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나, 미등록 이주민, 화교, 이주노동자 가족 등을 제도권 외로 배제하는 등 이주민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재한외국인 정책은 그들의 권리 보호보다는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상호문화주의자와 관련해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연구자인 Taylor는 2012년 'Interculturalism or multiculturalism?(상호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주의?)'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양

성과 통합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전자를 포괄적인 다문화주의와 제한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고, 제한적 다문화주의와 구별되는 것을 상호문화주의로 가정하면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차이는 해당 정책의 근거가 되는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포괄적인 다문화주의가 ‘차이의 인정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 할 경우, 상호문화주의는 통합에 초점을 둔 것이고, 다문화주의(제한적)는 다양성의 인정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에 관련한 비판과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공존과 통합, 소통, 상호작용 등 핵심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으나,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흔히 소수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 인정과 문화 다양성의 지향 정도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어 온 다문화정책은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Castles & Miller, 2003; 한건수, 2006; 최영민 외, 2009; 강기정 외, 2010; 전성훈·오은지, 2019).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차별·배제모형을 제외하고 동화모형과 다문화모형은 소수 이민자 또는 하위문화집단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에 기반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그들의 적응 노력과 함께 주류집단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화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다(이혜경 2010; 김이선 외, 2018). 다시 말해 주류집단 또는 지배문화 구성원의 태도와 인식이 다문화사회로 전개되는 데 적합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상호문화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종합하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각각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은 대동소이하나, 상호문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문화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유 가능한 문화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류집단 또는 지배문화구성원으로 표현되는 원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소수 이민문화의 인정을 넘어서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와 인식을 기반으로 그들과 소통을 통해 상호작용하려는 원주민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제2절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

1. 다문화수용성의 개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문화주의의 핵심적인 조건이 원주민의 수용 노력이라고 할 때, 이 같은 노력은 그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그 결과가 이주민 간 건전한 의사소통과 교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多文化)’와 ‘수용성(受容性)’을 결합한 용어로 전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생활양식이 하나의 지역 또는 사회에 공존하는 것’이며, 후자는 ‘다른 것으로부터 사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사물 쪽에서 촉발에 따라 표상(表象: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받아들이는 능력²⁾’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의 일반적 의미는 다문화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소수집단)의 문화적 영향력 중 필요한 것을 다른 집단(다수집단)이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의 학술적 정의는 그것을 연구한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Spitzberg(1991)는 이질적인 문화 간 경계를 넘어 차이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역량으로 이해하였으며, 그것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별 문화 속에서 적합한 행위를 강조하였다. Chen & Starosta(2000)는 다른 문화집단 간 효과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으로 보았으며, 김옥순(2008)은 타문화와 친밀감, 차이의 인정, 접촉에 따른 문제의 해결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윤인진·송영호(2011)는 다문화수용성을 다른 문화의 인정과 태도, 열린 사고로 정의하였으며, 민무숙 외(2010)는 타 문화의 편견을 배제하고 자문화와 동등하게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2.04.23.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 관계를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승대·안태준(2013)은 다문화사회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로 이해하였다.

정리하면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 전개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타 문화의 편견과 경쟁을 배제하고 자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존중하며, 상호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조화로운 공존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주류집단 또는 원주민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논지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의 부재는 타 문화 또는 인종집단과 관련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간 편견과 차별을 발생시킨다(Berry & Kalin, 1995). 또한 사회 주류집단의 불안감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이주집단에 관한 불안의 정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에는 밀접한 관계성이 존재한다(백승대·안태준, 2013).

한편 수용성이라는 용어는 Hoopes(1979)의 문화유능성(cultural competency)과 Bennett(1993)의 문화간감수성발달모델(DMIS: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양자 모두 개인의 관점에서 문화학습 과정이 일정한 발달의 단계를 거친다고 가정한다(안상수 외, 2015). 문화유능성은 ‘자 민족중심주의’에서 ‘인식’, ‘이해’, ‘수용·존중’, ‘음미·가치부여’, ‘선택적 채택’, ‘다문화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여기서 수용은 자문화 간 비교와 가치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간감수성발달모델은 개개인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부정’에서 ‘방어’, ‘최소화’, ‘수용’, ‘적응’, ‘통합’의 단계로 구성되고, 여기서 수용단계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가 지닌 차이점을 이해하며, 개인이 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다문화수용성이 문화유능성과 다문화감수성에서 하위 개념으로 활용되나, 집단적인 관점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 다문화수용성이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공존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경우, 수용의 주체는 문화적 다수자이며 객체는 문화적 소수자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즉, 다문화수용성이 다수의 주류문화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의 적응을 다루고 있다면, 문

화감수성은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적 관점에서 문화학습의 발전단계를 설명하는 것이다(안상수 외, 2015).

2. 다문화수용성 측정 도구

이주민을 향한 원주민의 태도 또는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외국에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 대륙 이상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와 ‘유럽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 모니터링 센터(EUMC: Europe Monitoring C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영국의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그것이다.

먼저 IMO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 ‘How the World Views Migration’에서 140개국 총 183,000명을 대상으로 소수자·이민자에 대한 자국민의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EUMC는 2005년 발표한 보고서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EU회원국과 후보국을 대상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고,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Survey)의 1997년, 2000년, 2003년 데이터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의 2003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채텀하우스는 2017년 출간한 ‘Understanding Public Attitudes Towards Refugees and Migrants’ 연구에서 관련 전문가가 추천한 160건 이상의 연구 자료와 20명의 전문가, 국제개발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와의 공동포럼(The 2017 Forum on Refugee and Migration Policy)을 바탕으로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원주민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수용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수

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연구는 크게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추진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해당 연구 이전에는 앞서 언급한 해외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과 종족배제주의(ethnic exclusivism)를 활용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오계택, 2007; 김혜숙, 2007; 윤인진·송영호, 2007; 양계민, 2009; 이명진·최유정·최셋별, 2010). 추가로 보편적 권리 수용과 집합적 위협 인지, 다문화 배제 태도 등이 보완적으로 활용되었다(황정미, 2007·2010; 맹진학, 2009).

그리고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배제주의적 태도, 사회적 거리감 등의 측정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을 확인하는 연구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는 연구 그리고 보편적 권리 수용과 집합적 위협 인지같이 상이한 방향성을 지닌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어 왔다.

[표 2-2] 다문화수용성 측정 관련 연구

| 연도 | 연구자 | 연구대상 | 측정 요인 |
|------|------------|--|---|
| 2007 | 오계택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경기·인천지역 사업장 322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주의적 태도, 사회적 거리감 - Eurobarometer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 활용 |
| 2007 | 김혜숙 | 전국 단위 비례할당표집 2,000명(제주도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보편주의 가치, 권력가치 및 자기지도·성취 가치 ▣ 종속변수: 집단에 대한 태도(호감, 신뢰, 사회적 거리감) |
| 2007 | 최현 | 한국여성개발원 조사결과 활용 (한국갤럽: 07.06 ~ 07.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정체성, 외국인 귀화에 대한 태도, 이주자 권리에 대한 태도, 새터민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태도 |
| 2007 | 황정미 |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단일민족 자긍심, 시민성 ▣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보편적 권리수용, 집합적 위협 인지) |
| 2007 | 윤인진 송영호 | 전국 단위 비례할당표집 1,500명(리서치21: 07.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념적 성향, 반사회적 집단에 대한 관용도, 다문화 주의에대한 태도, 사회적 거리감 |
| 2009 | 맹진학 | 전국 단위 다단계지역층화표집 1,293명(한국종합사회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다층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계층 귀속감, 취업 여부, 공정성, 자부심, 친밀도, 다문화 대응전략, 자기-개선, 개방성, 보존, 자기-초월 - 2층: 외국인등록 비율, 최저생계 비율 ▣ 종속변수: 다문화 배제 태도(수용 요인, 배제 요인) |
| 2009 | 양계민 | 전국 초중고 학생(6개 시도) 3,14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한민족정체성, 자민족중심주의 ▣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종족배제주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

| 연도 | 연구자 | 연구대상 | 측정 요인 |
|------|-------------------|--|---|
| 2010 | 이명진 최유정 최선헌 |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감정적 인식(평가성, 권력성, 활동성) ■ 종속변수: 사회적 거리감 |
| 2010 | 황정미 | 200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변수: 단일민족 자긍심, 이념성향, 시민성 ■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보편적 권리수용, 집합적 위협 인지) |
| 2010 | 민무숙 외 5명 | 전국 단위 1,164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차원, 관계성 차원 - 하위 구성요소: 태도의 인지, 정서, 행동 |
| 2012 | 안상수 외 4명 | 전국 단위 무선비례표본 추출 2,500명 (GH코리아: 11.12 ~ 12.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 보편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
| 2012 | 민무숙 외 4명 | 전국 단위 무선비례표본 추출 2,50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 보편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
| 2015 | 안상수 외 4명 | 일반국민: 전국 4,000명 청소년: 전국 3,64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 보편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 관계성: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행동의지 - 보편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
| 2018 | 김이선 외 6명 | 일반국민: 전국 4,000명 청소년: 전국 4,225명 | 상동 |
| 2022 | 김이선 외 5명 | 일반국민: 전국 5,000명 청소년: 전국 5,000명 | 상동 |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 이후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며,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시험적 연구로 진행된 것이 2010년 민무숙 외의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를 다양성(diversity) 차원과 관계성(relationship)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태도의 인지(cognitive), 정서(affective), 행동(behavioral)으로 설정하여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표 2-3]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의 주요 내용

| 연도 | 연구자 | 측정 대상 | 차원 | 개념 | 구성요소 |
|------|----------|---------|--------------------|---|--|
| 2010 | 민무숙 외 5명 | 다문화 수용성 | 다양성 (divers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집단 또는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자문화와 동등하게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cogn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성, 고정관념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aff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정체성 |
| | | | 관계성 (relationsh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이민자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주류집단의 적극적 통합 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behavio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성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cogni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중심성 정서(aff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부, 회피 행동(behavio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방향 관계 의지 |

자료: 민무숙 외,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2010.

사회통합위원회의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 개발 이후,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측정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발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가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지수(KMAI: 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와 ‘청소년용 다문화수용성지수(KMAI-A: Korea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for Adolescents)’이다. 각각의 지수는 한국의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진단도구 척도는 당초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를 기반으로 하되, 보편성 차원이 추가되었고, 하위 구성요소 또한 체계화되었으며, 척도 또한 5점 척도에서 6점 척도로 변경되었다.

[표 2-4]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지수(KMAI)의 주요 내용

| 측정 대상 | 차원 | 개념 | 구성요소 |
|---------|-----------------|---|---|
| 다문화 수용성 | 다양성 (divers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집단 또는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자문화와 동등하게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됨의 기준, 누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관념 및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완전한 정보에 따른 선입견 또는 부정적 지식 |

| 측정 대상 | 차원 | 개념 | 구성요소 | |
|-------|-----------------------|---|--|--|
| | 관계성 (relationsh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이민자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주류집단의 적극적 통합 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방적 동화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이 아닌 주류집단에 의해 요구되는 형태의 동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부·회피 정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 또는 이주문화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 회피 정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교류행동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의지 |
| | 보편성 (universali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의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과 개도국, 흑인과 백인 등 이중 잣대로 이주민을 대하는 경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시민행동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세계의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의지 |

자료 : 김이선 외.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22.

제 3 장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수준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제3절 다문화수용성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절 조사 설계

1. 분석 목적

앞서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전국 기준과 비교·분석하며,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고양시의 다문화수용성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핵심인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은 불특정 다수의 고양시민과 상대적으로 주민과 접촉이 잦은 하위직급(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으로 설명되는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를 적용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고양시민과 공무원의 상대적인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고양시 다문화수용성의 주요 차원과 세부 요인별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상호문화주의에 따라 주류집단인 고양시민의 자발적인 다문화수용성 증대 노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2. 분석 방법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지수(KMAI)’는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를 적용한 것으로 연구 대상에게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는 총 3개 차원(다양성, 관계성, 보편성)과 8개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6점 척도가 적용되고,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 구성 체계

| 측정 대상 | 차원 | 개념 | 구성요소 | 척도 | 문항 수 |
|------------|-----------------------|---|-------------|--------|------|
| 다문화 수용성 | 다양성 (diversity) | ▣ 타 집단 또는 문화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자문화와 동등하게 인정 | ▣ 문화개방성 | 서열(6점) | 4 |
| | | | ▣ 국민정체성 | 서열(6점) | 4 |
| | | | ▣ 고정관념 및 차별 | 서열(6점) | 7 |
| | 관계성 (relationship) | ▣ 소수이민자 집단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주류집단의 적극적 통합 의지 | ▣ 일방적 동화기대 | 서열(6점) | 4 |
| | | | ▣ 거부·회피 정서 | 서열(6점) | 3 |
| | | | ▣ 상호교류행동의지 | 서열(6점) | 4 |
| | 보편성 (universality) | ▣ 세계의 일관된 기준의 보편적 태도와 신념 | ▣ 이중적 평가 | 서열(6점) | 4 |
| | | | ▣ 세계시민행동의지 | 서열(6점) | 5 |
| 합계 | | | | | 35 |

자료: 김이선 외,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22.

한편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활용된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지수(KMAI)는 2011년에 진행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안상수 외, 2012)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0점에서 100점 단위의 환산점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문항별 원점수를 토대로 차원별, 세부 요인별,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구하고 세부 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일반 국민 다문화수용성지수(KMAI)를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검증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인 전국 기준 다문화수용성지수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표 3-2]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원점수 채점표

| 측정 대상 | 차원 | 세부 요인 | 문항 수 | 총점 | 가중치 | 문항 범위 | 역채점 문항 |
|------------|-----|-------------|------|----|-----|---------|--------|
| 다문화 수용성 | 다양성 | ▣ 문화개방성 | 4 | 24 | 12 | 1 ~ 4 | 4 |
| | | ▣ 국민정체성 | 4 | 24 | 13 | 5 ~ 8 | 전체 |
| | | ▣ 고정관념 및 차별 | 7 | 42 | 14 | 9 ~ 15 | 전체 |
| | | 소계 | 15 | 90 | - | 1 ~ 15 | 12 |
| | 관계성 | ▣ 일방적 동화기대 | 4 | 24 | 12 | 16 ~ 19 | 전체 |

| 측정 대상 | 차원 | 세부 요인 | 문항 수 | 총점 | 가중치 | 문항 범위 | 역채점 문항 |
|---------------|--|------------|------|-----|-----|---------|--------|
| | | ▣ 거부·회피 정서 | 3 | 18 | 14 | 20 ~ 22 | 전체 |
| | | ▣ 상호교류행동의지 | 4 | 24 | 12 | 23 ~ 26 | - |
| | | 소계 | 11 | 66 | - | 16 ~ 26 | 7 |
| | 보편성 | ▣ 이중적 평가 | 4 | 24 | 12 | 27 ~ 30 | 전체 |
| | | ▣ 세계시민행동의지 | 5 | 30 | 11 | 31 ~ 35 | - |
| | | 소계 | 9 | 54 | - | 27 ~ 35 | 4 |
| | 합계 | | 35 | 210 | - | 1 ~ 35 | 23 |
| 다문화 수용성 측정 산식 | $\text{다문화수용성지수}(KMAI) = \frac{\sum_{j=1}^8 w_j \bar{X}_j - \sum_{j=1}^8 w_j}{(r-1) \times \sum_{j=1}^8 w_j} \times 100$ | | | | | | |

주: \bar{X}_j 는 개인의 측정변수 j 의 평균값

r 은 측정변수의 척도 범위(6점 척도)

w_j 는 측정변수 j 의 비율로 환산된 가중치

3. 조사 체계

고양시의 다문화수용성 수준 측정은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 또는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고양시 정책인 ‘고양청년인턴 200’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인턴으로 채용된 200명의 조사원이 직접 고양시민(20세 이상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한 면접 형태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는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의 가공을 거쳐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협조 공문을 통한 자율 참여 방식을 적용하여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고, 본청과 일반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직·사업소의 6급 이하 하위직급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모두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를 적용하였고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지수(KMAI)를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만 양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단기간 내에 변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양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함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실증조사 체계

| 구 분 | 주요 내용 | |
|-------|--|--|
| 조사 목적 | ▣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이주민에 대한 태도·인식) 수준 확인 | |
| 조사 시기 | 고양시민 | ▣ 2020년 10~12월 |
| | 고양시 공무원 | ▣ 2022년 4~5월 |
| 조사 방법 | 고양시민 | ▣ 고양시정연구원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아카이빙 활용 - ‘고양청년인턴 200’ 사업을 통한 설문조사 |
| | 고양시 공무원 | ▣ 협조 공문을 통한 자율 참여 방식 적용 |
| 작성 방법 | 고양시민 | ▣ 구조화된 설문지의 면접식 적용 |
| | 고양시 공무원 | ▣ 구조화된 설문지의 자기 기입 방식 |
| 조사 대상 | 고양시민 | ▣ 불특정 다수의 고양시민(20세 이상 성인남녀) |
| | 고양시 공무원 | ▣ 고양시 공무원(6급 이하 하위직급) |
| 분석 방법 | ▣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를 활용한 일반인용 다문화수용성지수(KMAI) 도출 - 2012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 적용한 방법 준용 | |

제2절 조사 내용의 구성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바탕으로 하되, 현행 고양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다문화수용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3개 차원(다양성, 관계성, 보편성)과 각 차원의 8개 하위요인은 언급한 연구를 준용하였고,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과 다문화수용성 증대 정책의 필요성은 고양시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표 3-4] 설문조사 주요 내용

| 구 분 | | 설문 내용 | 설문 대상 | 척도 |
|----------------------------|--------------|--|-------------|------------|
| 다 문 화 수 용 성 | 문화 개방성 | ▣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 고양시민 공무원 | 서열 (6점) |
| | | ▣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 | |
| | |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 | |
| | | ▣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옆집, 위층, 아래층 등)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 | |
| | 국민 정체성 | ▣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 ▣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 ▣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고양시의회 의원, 대통령 후보, 고양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 |
| | | ▣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 | |
| | 고정관념 및 차별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 | |
| | | ▣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 | |
| |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 | |

| 구 분 | | | 설문 내용 | 설문 대상 | 척도 |
|-----|-----|-----------|--|----------|---------|
| 관계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라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 | |
| | | 일방적 동화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 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 고양시민 공무원 | 서열 (6점) |
| | | 거부, 회피 정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공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 | |
| | | 상호교류 행동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 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 내가 현재 미혼이거나, 만약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하겠다 | | |
| | 보편성 | 이중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 고양시민 공무원 | 서열 (6점) |
| | | | ■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 | |
| | | 세계시민 행동의지 | ■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 | |
| | | | | | |
| | | | | | |

| 구 분 | | | 설문 내용 | 설문 대상 | 척도 |
|--------------------------------|------------------------|--|---|-------|----|
| | | | <div><input type="checkbox"/>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div> <div><input type="checkbox"/>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div> <div><input type="checkbox"/>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div> | | |
| 기 타 일 반 사 항 |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 | <div><input type="checkbox"/> 귀하는 지금까지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div> | 고양시민 | 명목 | |
| | | <div><input type="checkbox"/> 귀하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div> | | | |
| | | <div><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div> | | | |
| | | <div><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함께 하는 취미, 문화, 스포츠 등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div> | | | |
| | 다문화수용성 증대 정책 필요성 | <div><input type="checkbox"/> 다문화 이해 교육</div> | 고양시민 | 서열 | |
| | | <div><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div> | | | |
| | | <div><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div> | | | |
| | | <div><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고양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div> | | | |

제3절 다문화수용성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

1) 고양시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시의 ‘고양청년인턴 200’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세 이상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면접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1,100부의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부실(무응답)하거나, 오염된 것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총 1,017명 중 남성이 40.5%(412명), 여성 58.5%(595명)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8.4%(289명)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40대 21.4%(218명), 20대 17.4%(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비중이 55.6%(565명)로 가장 높았고, 고졸 31.3%(318명), 대학원 이상 7.6%(77명) 순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주부 18.7%(190명), 자영업 18.4%(187명), 사무·관리직 15.3%(156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거주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덕양구가 423명(41.6%)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일산서구 323명(31.8%), 일산동구 258명(25.4%)으로 나타났다.

[표 3-5]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고양시민)

(단위: 명, %)

| 구 분 | | 고양시민 | |
|-----|------|-------|-------|
| | | 빈도 | 백분율 |
| 성별 | ① 남성 | 412 | 40.5 |
| | ② 여성 | 595 | 58.5 |
| | 무응답 | 10 | 1.0 |
| | 합계 | 1,017 | 100.0 |

| 구 분 | 고양시민 | |
|-----|--------------|--------------|
| | 빈도 | 백분율 |
| 연령 | ① 20대 | 177 |
| | ② 30대 | 155 |
| | ③ 40대 | 218 |
| | ④ 50대 | 289 |
| | ⑤ 60대 이상 | 162 |
| | 무응답 | 16 |
| | 합계 | 1,017 |
| 학력 | ① 중졸 이하 | 20 |
| | ② 고졸 | 318 |
| | ③ 대졸 | 565 |
| | ④ 대학원 이상 | 77 |
| | 무응답 | 37 |
| | 합계 | 1,017 |
| 직업 | ① 자영업 | 187 |
| | ② 생산·판매·서비스직 | 107 |
| | ③ 사무·관리직 | 156 |
| | ④ 주부 | 190 |
| | ⑤ 학생 | 68 |
| | ⑥ 공무원 | 63 |
| | ⑦ 무직 | 107 |
| | ⑧ 기타 | 111 |
| | 무응답 | 28 |
| | 합계 | 1,017 |
| 거주지 | ① 일산동구 | 258 |
| | ② 일산서구 | 323 |
| | ③ 덕양구 | 423 |
| | 무응답 | 13 |
| | 합계 | 1,017 |

2) 고양시 공무원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협조 공문을 통한 자율 참여 방식을 적용하여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6급 이하의 하위직급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21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내용이 부실(무응답)하거나, 오염된 설문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

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총 299명 중 남성이 35.8%(107명), 여성 64.2%(192명)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2.1%(9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9.8%(89명), 50대 24.7%(7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대졸 비중이 86.3%(258명)로 가장 높았고, 고졸 8.0%(24명), 대학원 이상 5.7%(17명) 순이었으며, 소속기관별로는 직·사업소 35.7%(107명), 동 행정복지센터 29.1%(87명), 본청 18.1%(54명), 일반 구청 17.1%(51명)로 확인되었다.

[표 3-6]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고양시 공무원)

(단위: 명, %)

| 구 분 | | 고양시민 | |
|----------|--------------|------|-------|
| | | 빈도 | 백분율 |
| 성별 | ① 남성 | 107 | 35.8 |
| | ② 여성 | 192 | 64.2 |
| | 무응답 | 0 | 0.0 |
| | 합계 | 299 | 100.0 |
| 연령 | ① 20대 | 38 | 12.7 |
| | ② 30대 | 89 | 29.8 |
| | ③ 40대 | 96 | 32.1 |
| | ④ 50대 | 74 | 24.7 |
| | ⑤ 60대 이상 | 2 | 0.7 |
| | 무응답 | 0 | 0.0 |
| | 합계 | 299 | 100.0 |
| 학력 | ① 고졸 | 24 | 8.0 |
| | ② 대졸 | 258 | 86.3 |
| | ③ 대학원 이상 | 17 | 5.7 |
| | 무응답 | 0 | 0.0 |
| | 합계 | 299 | 100.0 |
| 소속 기관 | ① 시 본청 | 54 | 18.1 |
| | ② 일반 구청 | 51 | 17.1 |
| | ③ 동 행정복지센터 | 87 | 29.1 |
| |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 | 107 | 35.7 |
| | 무응답 | 0 | 0.0 |
| | 합계 | 299 | 100.0 |

2.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다문화수용성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의 측정항목 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을 활용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35개 전체 문항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대상별로 각각 0.941과 0.938로 측정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양시민의 경우 ‘문화개방성’ 0.797, ‘국민정체성’ 0.799, ‘고정관념 및 차별’ 0.896, ‘일방적 동화기대’ 0.782, ‘거부, 회피 정서’ 0.917, ‘상호교류 행동의지’ 0.811, ‘이중적 평가’ 0.826, ‘세계시민행동의지’ 0.771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의 경우 ‘문화개방성’ 0.805, ‘국민정체성’ 0.841, ‘고정관념 및 차별’ 0.887, ‘일방적 동화기대’ 0.775, ‘거부, 회피 정서’ 0.904, ‘상호교류 행동의지’ 0.854, ‘이중적 평가’ 0.814, ‘세계시민행동의지’ 0.795로 나타났다.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 크론바흐 알파값이 0.60 이상이면 측정항목 간에 일관성이 존재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고려하면,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문항 설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측정항목의 신뢰도 분석 결과

| 구 분 | | | 설문구조 | 문항 수 | Alpha | |
|------------|-----|-----------|------------------------------|------|-------|---------|
| | | | | | 고양 시민 | 고양시 공무원 |
| 다문화 수용성 | 다양성 | 문화개방성 | ▣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유입 선호 등 | 4 | .797 | .805 |
| | | 국민정체성 | ▣ 피부색에 따른 한국인 인정 인식 등 | 4 | .799 | .841 |
| | | 고정관념 및 차별 | ▣ 외국 이주민들의 모국어를 활용한 온라인 활동 등 | 7 | .896 | .887 |
| | 관계성 | 일방적 동화기대 | ▣ 외국 이주민들의 한국 이해 노력 등 | 4 | .782 | .775 |
| | | 거부, 회피 정서 |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의 접촉 기피 등 | 3 | .917 | .904 |
| | | 상호교류 행동의지 | ▣ 외국 이주민과의 친목모임 등 | 4 | .811 | .854 |
| | 보편성 | 이중적 평가 | ▣ 선진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 선호 등 | 4 | .826 | .814 |
| | | 세계시민행동의지 | ▣ 새로운 문화에 대한 흥미 등 | 5 | .771 | .795 |
| | 전체 | | | 35 | .941 | .938 |

3. 다문화수용성 수준

1) 다양성

다문화수용성의 3가지 차원 중 ‘다양성’과 관련한 세부 문항은 총 15개(역채점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리커트 척도 6점이고, 설문 대상 집단 간의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8] 다양성 차원의 세부 질문체계

| 구 분 | | | 설문 대상 | | 척도 |
|-------------|---------------------|--|-------|-----|------------|
| | | | 고양시민 | 공무원 | |
| 다 양 성 | 문화 개방성 | ▣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 ○ | ○ | 서열 (6점) |
| | | ▣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 ○ | ○ | 서열 (6점) |
| | |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 ○ | ○ | 서열 (6점) |
| | | ▣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옆집, 위층, 아래층 등)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 ○ | ○ | 서열 (6점) |
| | 국민 정체성 | ▣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서열 (6점) |
| | | ▣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서열 (6점) |
| | | ▣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고양시의회 의원, 대통령 후보, 고양시장 후보로 나서 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 | ○ | 서열 (6점) |
| | | ▣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 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 ○ | ○ | 서열 (6점) |
| | 고정 관념 및 차별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 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 ○ | ○ | 서열 (6점) |
| | | ▣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 ○ | ○ | 서열 (6점) |
| |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 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 ○ | ○ | 서열 (6점) |
| | | ▣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라 모여서 자 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 ○ | ○ | 서열 (6점) |
| | | ▣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 ○ | ○ | 서열 (6점) |

| 구 분 | | | 설문 대상 | | 척도 |
|-----|--|---|-------|-----|---------|
| | | | 고양시민 | 공무원 | |
| | | ■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 ○ | ○ | 서열 (6점) |
| | | ■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 ○ | ○ | 서열 (6점) |

먼저 고양시민의 ‘다양성’ 차원은 59.84점이며, 하위요인으로 ‘문화개방성’ 54.74점, ‘국민정체성’ 56.17점, ‘고정관념 및 차별’ 68.60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양성’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 ‘다양성’은 20대가 64.77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40대(61.81점), 30대(61.35점), 50대(56.93점), 60대 이상(55.36점) 순이며, 다양성의 하위요인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에서는 30대가 40대보다 미미하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61.40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졸(60.55점), 고졸(59.48점), 중졸 이하(52.96점) 순으로 분석되었으나, 하위요인인 ‘문화개방성’은 대졸이 가장 높았고, ‘고정관념 및 차별’은 고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공무원의 ‘다양성’ 수준은 64.94점이며, 하위요인은 ‘문화개방성’ 52.71점, ‘국민정체성’ 67.15점, ‘고정관념 및 차별’ 74.97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다양성’과 그 하위요인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고양시민과 마찬가지로 20대가 66.53점으로 가장 높고, 50대(65.83점), 30대(65.76점), 40대(63.21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정체성’ 요인에서는 30대가 69.0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65.15점으로 가장 높으며, 하위요인 또한 같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양성’ 차원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인 ‘문화개방성’의 경우에는 고양시민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전국 기준인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고양시민과 공무원의 ‘다양성’ 차원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 또한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표 3-9] 다양성 차원의 분석 결과

| 구 분 | | | | 표본수(N) | 다양성 | 다양성 하위요인 | | |
|----------|----------|----|-----------|--------|-------|-----------|--------------|-------|
| 측정 시점 | 측정 대상 | | 문화 개방성 | | | 국민 정체성 | 고정관념 및 차별 | |
| 2020년 | 고양 시민 | 성별 | 남성 | 412 | 60.36 | 55.56 | 57.84 | 67.67 |
| | | | 여성 | 595 | 59.48 | 54.18 | 55.04 | 69.22 |
| | | 연령 | 20대 | 177 | 64.77 | 59.24 | 62.03 | 73.04 |
| | | | 30대 | 155 | 61.35 | 55.58 | 58.67 | 69.79 |
| | | | 40대 | 218 | 61.81 | 57.11 | 58.70 | 69.62 |
| | | | 50대 | 289 | 56.93 | 51.59 | 53.08 | 66.11 |
| | | | 60대 이상 | 162 | 55.36 | 51.25 | 49.16 | 65.66 |
| | | 학력 | 중졸 이하 | 20 | 52.96 | 51.62 | 48.50 | 58.75 |
| | | | 고졸 | 318 | 59.48 | 54.23 | 55.15 | 69.05 |
| | | | 대졸 | 565 | 60.55 | 55.69 | 56.98 | 68.98 |
| | | | 대학원 이상 | 77 | 61.40 | 54.48 | 60.78 | 68.94 |
| | | 전체 | | | 1,017 | 59.84 | 54.74 | 56.17 |
| 2022년 | 공무원 | 성별 | 남성 | 107 | 63.34 | 51.87 | 65.89 | 72.26 |
| | | | 여성 | 192 | 65.83 | 53.18 | 67.85 | 76.47 |
| | | 연령 | 20대 | 38 | 66.53 | 56.32 | 65.00 | 78.27 |
| | | | 30대 | 89 | 65.76 | 52.81 | 69.04 | 75.42 |
| | | | 40대 | 96 | 63.21 | 49.48 | 66.04 | 74.11 |
| | | | 50대 | 74 | 65.83 | 55.34 | 68.01 | 74.13 |
| | | | 60대 이상 | 2 | 48.93 | 37.50 | 45.00 | 64.29 |
| | | 학력 | 중졸 이하 | 0 | 0.00 | 0.00 | 0.00 | 0.00 |
| | | | 고졸 | 24 | 63.48 | 49.38 | 68.75 | 72.31 |
| | | | 대졸 | 258 | 65.15 | 53.12 | 67.08 | 75.24 |
| | | | 대학원 이상 | 17 | 63.86 | 51.14 | 65.88 | 74.56 |
| | | 전체 | | | 299 | 64.94 | 52.71 | 67.15 |
| 2021년 | 일반 국민 | 성별 | 남성 | 2,545 | 54.39 | 48.87 | 50.03 | 63.16 |
| | | | 여성 | 2,455 | 53.49 | 47.18 | 48.33 | 63.69 |
| | | 연령 | 20대 | 921 | 56.50 | 50.17 | 52.21 | 65.90 |
| | | | 30대 | 874 | 54.82 | 49.50 | 49.95 | 63.89 |
| | | | 40대 | 1,018 | 54.39 | 48.92 | 49.78 | 63.36 |
| | | | 50대 | 1,063 | 53.08 | 46.99 | 48.52 | 62.53 |
| | | | 60대 이상 | 1,123 | 51.60 | 45.35 | 46.25 | 51.93 |
| | | 학력 | 중졸 이하 | 521 | 51.77 | 45.52 | 46.72 | 51.90 |
| | | | 고졸 | 2,044 | 52.89 | 47.33 | 47.98 | 62.22 |
| | | | 전문대졸 | 1,082 | 54.28 | 49.07 | 49.79 | 62.91 |
| | | | 4년제 대졸 | 1,306 | 56.08 | 49.39 | 51.36 | 66.20 |
| | | | 대학원 이상 | 46 | 56.85 | 46.82 | 55.11 | 67.06 |
| 전체 | | | 5,000 | 53.95 | 48.04 | 49.20 | 63.42 | |

2) 관계성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성’ 차원 관련 세부 문항은 총 11개(역채점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리커트 척도 6점이고, 설문 대상 집단 간의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10] 관계성 차원의 세부 질문체계

| 구 분 | | | 설문대상 | | 척도 |
|-------------|----------------------|--|------|-----|---------|
| | | | 고양시민 | 공무원 | |
| 관 계 성 | 일방적 동화 기대 |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 ○ | ○ | 서열 (6점) |
| | |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 ○ | ○ | 서열 (6점) |
| |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 | ○ | 서열 (6점) |
| |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 ○ | ○ | 서열 (6점) |
| | 거부, 회피 정서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 ○ | ○ | 서열 (6점) |
| | |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 ○ | ○ | 서열 (6점) |
| |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 ○ | ○ | 서열 (6점) |
| | 상호 교류 행동 의지 |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 ○ | ○ | 서열 (6점) |
| | |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 ○ | ○ | 서열 (6점) |
| | | 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 ○ | ○ | 서열 (6점) |
| | | 내가 현재 미혼이거나, 만약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 하겠다 | ○ | ○ | 서열 (6점) |

먼저 고양시민의 ‘관계성’ 차원은 57.70점이며, 하위요인은 ‘일방적 동화기대’ 53.92점, ‘거부, 회피 정서’ 69.00점, ‘상호교류 행동의지’ 50.16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성’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교류 행동의지’ 요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 ‘관계성’은 20대가 61.56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40대(58.84점), 30대(58.71점), 50대(56.16점), 60대 이상(53.31점) 순이며, 관계성의 하위요인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거부,

회피 정서' 요인에서는 30대가 40대보다 미미하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59.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58.70점), 대졸(57.77점), 중졸 이하(46.23점) 순으로 분석되었으나, 하위요인인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대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공무원의 '관계성' 수준은 62.98점이며, 하위요인은 '일방적 동화기대' 64.80점, '거부, 회피 정서' 74.85점, '상호교류 행동의지' 49.31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고양시민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상호교류 행동의지' 요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6.53점으로 가장 높고, 50대(65.46점), 30대(63.85점), 40대(59.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 '일방적 동화기대'의 경우 낮은 연령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고, '상호교류 행동의지'에서는 50대가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68.61점으로 가장 높으며, 하위요인 또한 같은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관계성' 차원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인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경우에는 고양시민이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전국 기준인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고양시민과 공무원의 '관계성' 차원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 또한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표 3-11] 관계성 차원의 분석 결과

| 구 분 | | | | 표본수(N) | 관계성 | 관계성 하위요인 | | |
|----------|----------|----|--------|--------|-------|-------------|--------------|--------------|
| 측정 시점 | 측정 대상 | | | | | 일방적 동화기대 | 거부, 회피 정서 | 상호교류 행동의지 |
| 2020년 | 고양 시민 | 성별 | 남성 | 412 | 57.51 | 52.05 | 68.57 | 51.91 |
| | | | 여성 | 595 | 57.82 | 55.19 | 69.30 | 48.98 |
| | | 연령 | 20대 | 177 | 61.56 | 56.13 | 74.92 | 53.64 |
| | | | 30대 | 155 | 58.71 | 54.61 | 70.54 | 50.99 |
| | | | 40대 | 218 | 58.84 | 54.90 | 69.38 | 52.25 |
| | | | 50대 | 289 | 56.16 | 54.01 | 66.23 | 48.24 |
| | | | 60대 이상 | 162 | 53.31 | 49.04 | 65.81 | 45.07 |
| | | 학력 | 중졸 이하 | 20 | 46.23 | 40.50 | 57.00 | 41.18 |

| 구 분 | | | | 표본수(N) | 관계성 | 관계성 하위요인 | | | | |
|----------|--------|-------|----------|--------|-------|-------------|--------------|--------------|-------|-------|
| 측정 시점 | 측정 대상 | | | | | 일방적 동화기대 | 거부, 회피 정서 | 상호교류 행동의지 | | |
| | | | 고졸 | 318 | 58.70 | 56.33 | 69.88 | 49.88 | | |
| | | | 대졸 | 565 | 57.77 | 53.22 | 69.11 | 50.98 | | |
| | | | 대학원 이상 | 77 | 59.53 | 56.88 | 71.52 | 50.19 | | |
| | | | 전체 | 1,017 | 57.70 | 53.92 | 69.00 | 50.16 | | |
| 2022년 | 공무원 | 성별 | 남성 | 107 | 62.66 | 62.52 | 74.58 | 50.89 | | |
| | | | 여성 | 192 | 63.16 | 66.07 | 75.00 | 48.42 | | |
| | | 연령 | 20대 | 38 | 65.63 | 67.76 | 80.18 | 48.95 | | |
| | | | 30대 | 89 | 63.85 | 65.22 | 76.78 | 49.55 | | |
| | | | 40대 | 96 | 59.33 | 64.43 | 69.44 | 44.11 | | |
| | | | 50대 | 74 | 65.46 | 63.38 | 76.94 | 56.06 | | |
| | | | 60대 이상 | 2 | 58.33 | 60.00 | 70.00 | 45.00 | | |
| | | 학력 | 중졸 이하 | 0 | 0.00 | 0.00 | 0.00 | 0.00 | | |
| | | | 고졸 | 24 | 65.93 | 67.92 | 80.28 | 49.58 | | |
| | | | 대졸 | 258 | 62.34 | 64.32 | 73.82 | 48.88 | | |
| | | | 대학원 이상 | 17 | 68.61 | 67.65 | 82.75 | 55.44 | | |
| | | | 전체 | 299 | 62.98 | 64.80 | 74.85 | 49.31 | | |
| | | 2021년 | 일반 국민 | 성별 | 남성 | 2,545 | 51.77 | 48.30 | 64.99 | 39.82 |
| | | | | | 여성 | 2,455 | 50.39 | 48.76 | 62.68 | 37.67 |
| | | | | 연령 | 20대 | 921 | 53.35 | 50.06 | 66.27 | 41.58 |
| | | | | | 30대 | 874 | 51.88 | 49.66 | 63.51 | 40.53 |
| 40대 | 1,018 | | | | 51.52 | 49.08 | 63.58 | 39.88 | | |
| 50대 | 1,063 | | | | 50.63 | 48.44 | 63.23 | 38.12 | | |
| 60대 이상 | 1,123 | | | | 48.67 | 45.97 | 62.99 | 34.67 | | |
| 학력 | 중졸 이하 | | | 521 | 47.65 | 45.53 | 61.73 | 33.33 | | |
| | 고졸 | | | 2,044 | 50.59 | 48.07 | 63.67 | 37.85 | | |
| | 전문대졸 | | | 1,082 | 50.80 | 48.73 | 62.44 | 39.29 | | |
| | 4년제 대졸 | | | 1,306 | 53.26 | 50.29 | 65.84 | 41.56 | | |
| 대학원 이상 | 46 | | | 57.64 | 48.06 | 73.08 | 49.20 | | | |
| | 전체 | | | 5,000 | 51.09 | 48.53 | 63.86 | 38.76 | | |

3) 보편성

다문화수용성의 ‘보편성’ 차원과 관련한 세부 문항은 총 9개(역채점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리커트 척도 6점이고, 설문 대상 집단 간의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12] 보편성 차원의 세부 질문체계

| 구 분 | | 설문대상 | | 척도 | |
|-----|----------------------|---|-----|----|------------|
| | | 고양시민 | 공무원 | | |
| 보편성 | 이중적 평가 | ▣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 ○ | ○ | 서열 (6점) |
| | | ▣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 ○ | ○ | 서열 (6점) |
| | | ▣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서열 (6점) |
| | | ▣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 ○ | ○ | 서열 (6점) |
| | 세계 시민 행동 의지 | ▣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 ○ | ○ | 서열 (6점) |
| | | ▣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 ○ | ○ | 서열 (6점) |
| | | ▣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 ○ | ○ | 서열 (6점) |
| | | ▣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 ○ | ○ | 서열 (6점) |
| | | ▣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 ○ | ○ | 서열 (6점) |

먼저 고양시민의 ‘보편성’ 차원은 60.98점이며, 하위요인은 ‘이중적 평가’ 58.02점, ‘세계시민 행동의지’ 63.93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편성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계시민 행동의지’ 요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 ‘보편성’은 20대가 63.0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30대(62.00점), 40대(61.84점), 50대(59.96점), 60대 이상(58.35점) 순이며, 보편성의 하위요인 또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세계시민 행동의지’ 요인에서는 4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62.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졸(61.42점), 고졸(60.53점), 중졸 이하(53.23점) 순으로 분석되었으나, 하위요인인 ‘이중적 평가’는 대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편성’ 수준은 63.01점이며, 하위요인은 ‘이중적 평가’ 63.42점, ‘세계시민 행동의지’ 62.61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는 고양시민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는 20대가 66.03점으로 가장 높고, 30대(64.13점), 50대(63.28점), 40대(60.74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 ‘이중적 평가’는 같은 경향을 보였고, ‘세계시민 행동의지’의 경우에는 20대 다음으로 50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64.94점으로 가장 높으며, 하위요인 또한 같은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보편성’ 차원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인 ‘세계시민 행동의지’의 경우에는 고양시민이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전국 기준인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고양시민과 공무원의 ‘보편성’ 차원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위요인 또한 같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표 3-13] 보편성 차원의 분석 결과

| 구 분 | | | | 표본수(N) | 보편성 | 보편성 하위요인 | |
|----------|----------|----|--------|--------|-------|----------|-----------|
| 측정 시점 | 측정 대상 | | | | | 이중적 평가 | 세계시민 행동의지 |
| 2020년 | 고양 시민 | 성별 | 남성 | 412 | 60.42 | 56.79 | 64.06 |
| | | | 여성 | 595 | 61.35 | 58.85 | 63.85 |
| | | 연령 | 20대 | 177 | 63.00 | 62.22 | 63.79 |
| | | | 30대 | 155 | 62.00 | 59.87 | 64.13 |
| | | | 40대 | 218 | 61.84 | 58.65 | 65.02 |
| | | | 50대 | 289 | 59.96 | 56.16 | 63.76 |
| | | | 60대 이상 | 162 | 58.35 | 54.02 | 62.68 |
| | | 학력 | 중졸 이하 | 20 | 53.23 | 53.70 | 52.76 |
| | | | 고졸 | 318 | 60.53 | 57.43 | 63.64 |
| | | | 대졸 | 565 | 61.42 | 58.65 | 64.18 |
| | | | 대학원 이상 | 77 | 62.41 | 58.62 | 66.20 |
| | | 전체 | | | 1,017 | 60.98 | 58.02 |
| 2022년 | 공무원 | 성별 | 남성 | 107 | 61.25 | 60.33 | 62.17 |
| | | | 여성 | 192 | 64.00 | 65.15 | 62.85 |
| | | 연령 | 20대 | 38 | 66.03 | 67.63 | 64.42 |
| | | | 30대 | 89 | 64.13 | 66.97 | 61.30 |
| | | | 40대 | 96 | 60.74 | 60.07 | 61.42 |
| | | | 50대 | 74 | 63.28 | 61.76 | 64.81 |
| | | | 60대 이상 | 2 | 54.75 | 47.50 | 62.00 |
| | | 학력 | 중졸 이하 | 0 | 0.00 | 0.00 | 0.00 |

| 구 분 | | | | 표본수(N) | 보편성 | 보편성 하위요인 | |
|----------|----------|----|--------|--------|-------|----------|-----------|
| 측정 시점 | 측정 대상 | | | | | 이중적 평가 | 세계시민 행동의지 |
| 2021년 | | | 고졸 | 24 | 62.29 | 65.42 | 59.17 |
| | | | 대졸 | 258 | 62.95 | 63.15 | 62.76 |
| | | | 대학원 이상 | 17 | 64.94 | 64.71 | 65.18 |
| | | 전체 | | 299 | 63.01 | 63.42 | 62.61 |
| | 일반 국민 | 성별 | 남성 | 2,545 | 51.43 | 48.64 | 54.46 |
| | | | 여성 | 2,455 | 51.35 | 49.14 | 53.75 |
| | | 연령 | 20대 | 921 | 52.28 | 48.29 | 57.25 |
| | | | 30대 | 874 | 51.68 | 48.24 | 55.43 |
| | | | 40대 | 1,018 | 52.07 | 49.92 | 54.42 |
| | | | 50대 | 1,063 | 51.57 | 49.40 | 53.93 |
| | | | 60대 이상 | 1,123 | 49.39 | 48.47 | 50.39 |
| | | 학력 | 중졸 이하 | 521 | 48.88 | 48.74 | 49.03 |
| | | | 고졸 | 2,044 | 50.69 | 48.79 | 52.77 |
| | | | 전문대졸 | 1,082 | 51.36 | 48.71 | 54.26 |
| | | | 4년제 대졸 | 1,306 | 53.22 | 49.09 | 57.73 |
| | | | 대학원 이상 | 46 | 59.03 | 53.76 | 64.79 |
| | | 전체 | | 5,000 | 51.39 | 48.89 | 54.11 |

4) 다문화수용성 수준 종합

앞서 살펴본 다문화수용성의 세 가지 차원인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수준의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분석하면 다음 [표 3-14]와 같다.

종합적으로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59.32점이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63.73점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일반 국민 다문화수용성지수(52.27점)와 비교하면 고양시민과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양시민의 경우 세 가지 차원 중 ‘보편성’이 60.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요인으로는 ‘거부, 회피 정서’ 요인이 69.0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청년층과 중년층, 고졸 이상 학력의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낮은 연령일수록 그리고 높은 학력일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고양시민의 세부 집단별로는 20대(다양성)를 제외하고 ‘보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 대다수 집단은 ‘거부, 회피 정서’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40대와 중졸 이하의 집단은 ‘고정관

념 및 차별'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고양시 공무원의 경우 세 가지 차원 중 '다양성'이 64.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요인으로는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이 74.97점으로 가장 높아 고양시민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청년층과 일부 장년층, 고졸과 대학원 이상 학력의 공무원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낮은 연령일수록 그리고 높은 학력일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40대와 대졸 학력자의 경우에는 고양시민에서 나타난 경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세부 집단별로는 고졸과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 '관계성' 차원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양성' 차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는 다수의 집단에서 '거부, 회피 정서' 요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과 40대, 대졸 학력의 경우에는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 기준의 일반 국민은 고양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양성' 차원이 가장 높고, 하위요인으로는 고양시민과 같이 '거부, 회피 정서' 요인이 가장 높으며, 성별로 구분하면 고양시와 달리 남성의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연령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수준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와 더불어 개별 차원의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양태 또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고양시 공무원의 경우 '보편성' 차원 내에서 '이중적 평가'가 '세계시민 행동의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고양시민은 일반 국민과 다소 상이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측정 시점 | 구 분 | | 표본수 (N) | 다문화 수용성 (전체) | 다양성 | 다양성 하위요인 | | | 관계성 | 관계성 하위요인 | | | 보편성 | 보편성 하위요인 | |
|----------|----------|-----------|------------|--------------------|-------|-----------|--------------|-------------|-------|-----------------|--------------|-----------|-------|--------------|-------|
| | 측정 대상 | 문화 개방성 | | | | 국민 정체성 | 고정관념 및 차별 | 일반적 동화기대 | | 거부, 회피 경서 | 상호교류 행동의지 | 이중적 평가 | | 세계시민 행동의지 | |
| 2021년 | | | 고졸 | 64.10 | 63.48 | 49.38 | 68.75 | 72.31 | 65.93 | 67.92 | 80.28 | 49.58 | 62.29 | 65.42 | 59.17 |
| | | | 대졸 | 63.55 | 65.15 | 53.12 | 67.08 | 75.24 | 62.34 | 64.32 | 73.82 | 48.88 | 62.95 | 63.15 | 62.76 |
| | | | 대학원 이상 | 65.91 | 63.86 | 51.14 | 65.88 | 74.56 | 68.61 | 67.65 | 82.75 | 55.44 | 64.94 | 64.71 | 65.18 |
| | | 성별 | 전체 | 63.73 | 64.94 | 52.71 | 67.15 | 74.97 | 62.98 | 64.80 | 74.85 | 49.31 | 63.01 | 63.42 | 62.61 |
| | | | 남성 | 52.71 | 54.39 | 48.87 | 50.03 | 63.16 | 51.77 | 48.30 | 64.99 | 39.82 | 51.43 | 48.64 | 54.46 |
| | | | 여성 | 51.82 | 53.49 | 47.18 | 48.33 | 63.69 | 50.39 | 48.76 | 62.68 | 37.67 | 51.35 | 49.14 | 53.75 |
| | 일반 국민 | 연령 | 20대 | 54.40 | 56.50 | 50.17 | 52.21 | 65.90 | 53.35 | 50.06 | 66.27 | 41.58 | 52.28 | 48.29 | 57.25 |
| | | | 30대 | 52.98 | 54.82 | 49.50 | 49.95 | 63.89 | 51.88 | 49.66 | 63.51 | 40.53 | 51.68 | 48.24 | 55.43 |
| | | | 40대 | 52.77 | 54.39 | 48.92 | 49.78 | 63.36 | 51.52 | 49.08 | 63.58 | 39.88 | 52.07 | 49.92 | 54.42 |
| | | | 50대 | 51.80 | 53.08 | 46.99 | 48.52 | 62.53 | 50.63 | 48.44 | 63.23 | 38.12 | 51.57 | 49.40 | 53.93 |
| | | | 60대 이상 | 49.98 | 51.60 | 45.35 | 46.25 | 51.93 | 48.67 | 45.97 | 62.99 | 34.67 | 49.39 | 48.47 | 50.39 |
| | 학력 | | 중졸 이하 | 49.54 | 51.77 | 45.52 | 46.72 | 51.90 | 47.65 | 45.53 | 61.73 | 33.33 | 48.88 | 48.74 | 49.03 |
| | | | 고졸 | 51.51 | 52.89 | 47.33 | 47.98 | 62.22 | 50.59 | 48.07 | 63.67 | 37.85 | 50.69 | 48.79 | 52.77 |
| | | | 전문대졸 | 52.29 | 54.28 | 49.07 | 49.79 | 62.91 | 50.80 | 48.73 | 62.44 | 39.29 | 51.36 | 48.71 | 54.26 |
| | | | 4년제 대졸 | 54.35 | 56.08 | 49.39 | 51.36 | 66.20 | 53.26 | 50.29 | 65.84 | 41.56 | 53.22 | 49.09 | 57.73 |
| | | | 대학원 이상 | 57.65 | 56.85 | 46.82 | 55.11 | 67.06 | 57.64 | 48.06 | 73.08 | 49.20 | 59.03 | 53.76 | 64.79 |
| | | | 전체 | 52.27 | 53.95 | 48.04 | 49.20 | 63.42 | 51.09 | 48.53 | 63.86 | 38.76 | 51.39 | 48.89 | 54.11 |

4. 기타 일반사항

기타 일반사항의 세부 문항은 총 8개(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 4개, 다문화수용성 증대정책 필요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개별 질문의 척도에 따라 분석 방법을 결정하였다.

[표 3-15] 기타 일반사항의 세부 질문체계

| 구 분 | | | 설문대상 고양시민 | 척도 |
|----------------------------|------------------------|--|--------------|------------|
| 기 타 일 반 사 항 |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 | ■ 귀하는 지금까지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 명목 (빈도) |
| | | ■ 귀하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명목 (빈도) |
| | | ■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명목 (빈도) |
| | | ■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함께 하는 취미, 문화, 스포츠 등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명목 (빈도) |
| | 다문화수용성 증대 정책 필요성 | ■ 다문화 이해 교육 | ○ | 서열 (5점) |
| | | ■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 | ○ | 서열 (5점) |
| | | ■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 | ○ | 서열 (5점) |
| | | ■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고양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 | ○ | 서열 (5점) |

1)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 행사 참석, 자원봉사와 동호회 활동 등 모든 질문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수용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경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도에 따른 자발적 참여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고양시민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한 접근성 자체가 낮을 수도 있겠으

나, 근본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인주민 간 호혜적·적극적 교류관계를 형성하려는 의향 또는 행동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6]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 분석 결과

|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다문화이해 교육 경험 | ① 있다 | 246 | 24.2 |
| | ② 없다 | 766 | 75.3 |
| | 무응답 | 5 | 0.5 |
| | 합계 | 1,017 | 100.0 |
| 다문화 행사 참석 경험 | ① 있다 | 178 | 17.5 |
| | ② 없다 | 834 | 82.0 |
| | 무응답 | 5 | 0.5 |
| | 합계 | 1,017 | 100.0 |
| 다문화 자원봉사 활동 경험 | ① 있다 | 123 | 12.1 |
| | ② 없다 | 889 | 87.4 |
| | 무응답 | 5 | 0.5 |
| | 합계 | 1,017 | 100.0 |
| 다문화 동호회 활동 경험 | ① 있다 | 121 | 11.9 |
| | ② 없다 | 890 | 87.5 |
| | 무응답 | 6 | 0.6 |
| | 합계 | 1,017 | 100.0 |

2) 다문화수용성 증대 정책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이 현저히 낮은 데 비해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에서는 과반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이해 교육은 응답자 중 63.3%, 문화교류 행사 58.7%, 이주자 대상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57.6%, 이주민과 함께하는 동호회 활성화 정책 50.5%가 해당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시행될 경우 참여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원주민의 자발적 교류 의지

의 발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17] 다문화수용성 증대 정책 필요성 분석 결과

| | 구 분 | 빈도 | 백분율(%) |
|----------------|-------------|-------|--------|
| 다문화이해 교육 | ① 전혀 필요치 않다 | 22 | 2.2 |
| | ② 필요하지 않다 | 35 | 3.4 |
| | ③ 보통이다 | 310 | 30.5 |
| | ④ 필요하다 | 512 | 50.3 |
| | ⑤ 매우 필요하다 | 132 | 13.0 |
| | 무응답 | 6 | 0.6 |
| | 합계 | 1,017 | 100.0 |
| | 평균값 | 3.69 | |
| 문화교류 행사 | ① 전혀 필요치 않다 | 23 | 2.3 |
| | ② 필요하지 않다 | 51 | 5.0 |
| | ③ 보통이다 | 341 | 33.5 |
| | ④ 필요하다 | 508 | 50.0 |
| | ⑤ 매우 필요하다 | 88 | 8.7 |
| | 무응답 | 6 | 0.6 |
| | 합계 | 1,017 | 100.0 |
| | 평균값 | 3.58 | |
|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 ① 전혀 필요치 않다 | 23 | 2.3 |
| | ② 필요하지 않다 | 54 | 5.3 |
| | ③ 보통이다 | 349 | 34.3 |
| | ④ 필요하다 | 496 | 48.8 |
| | ⑤ 매우 필요하다 | 90 | 8.8 |
| | 무응답 | 5 | 0.5 |
| | 합계 | 1,017 | 100.0 |
| | 평균값 | 3.57 | |
| 동호회 활성화 정책 | ① 전혀 필요치 않다 | 22 | 2.2 |
| | ② 필요하지 않다 | 71 | 7.0 |
| | ③ 보통이다 | 406 | 39.9 |
| | ④ 필요하다 | 437 | 43.0 |
| | ⑤ 매우 필요하다 | 76 | 7.5 |
| | 무응답 | 5 | 0.5 |
| | 합계 | 1,017 | 100.0 |
| | 평균값 | 3.47 | |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형다문화수용성척도(KMCI)를 활용하여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지수를 도출하였고, 2021년 당시의 전국 기준 일반 국민과 비교해 고양시 다문화수용성의 차별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고양시민과 공무원 모두 ‘관계성’의 하위요인인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소수의 문화 및 이민 집단과 상호 호혜적이며 적극적인 교류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 또는 의지가 ‘상호교류 행동의지’라 할 경우, 고양시민과 공무원은 이러한 노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고양시민과 공무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그들과 직접적인 교류 관계를 형성하려는 관심과 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물론 소수 이민집단과 그들의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통로(또는 과정)나 기회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들 간 교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나,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식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에 기반한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의 하위요인인 ‘세계시민행동의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거시적으로는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신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수의 비주류집단 간 적극적인 교류와 관계없이 일관되고 보편적인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비판하는 몇 가지 요인, 즉 존중과 인정이 아닌 온정적 배려에 따른 무관심과 주류집단 또는 주류문화를 인정하고 적응을 강요하는 경향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계시민행동의지’와 같은 차원에 속한 ‘이중적 평가’와

‘다양성’ 차원의 ‘국민정체성’, ‘관계성’ 차원의 ‘일방적 동화기대’ 수준을 함께 고려하면 이와 같은 특징은 보다 명확해진다.

제 4 장

국내외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사례 분석

제1절 사례 분석 체계

제2절 국내의 다문화수용성 정책 분석

제3절 외국의 다문화수용성 정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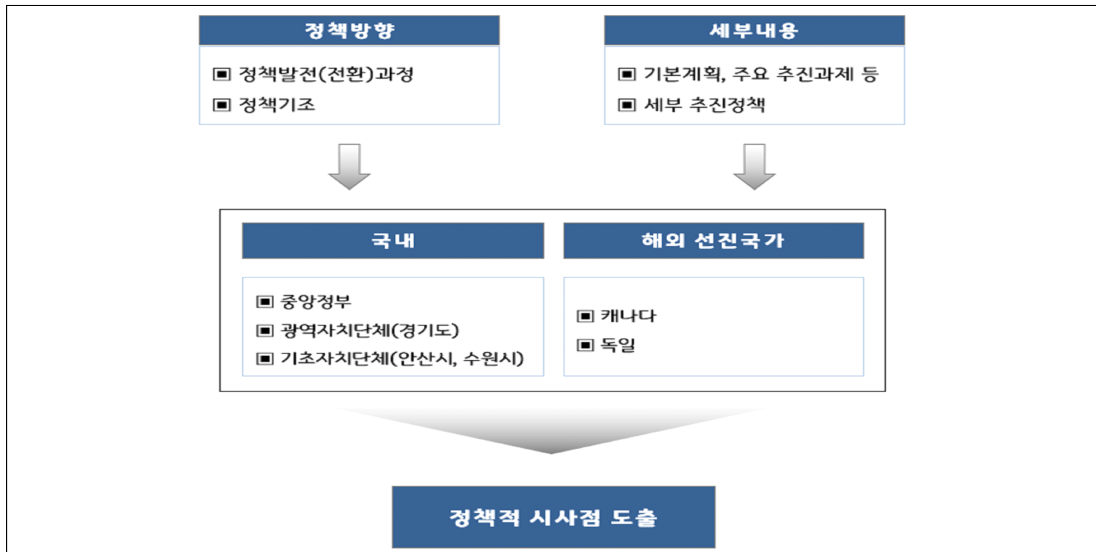
제4절 시사점

제절 사례 분석 체계

제4장에서는 국내외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사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비교분석은 최대유사체계설계(Most Similar System Design)에 따른 비교라 할 수 있다. 최대유사체계설계에 따른 비교분석은 정책의 특성과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적실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Przeworski & Teune, 1970).

정책 비교분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식은 국가 간의 비교분석이다. 즉, 한 국가의 정책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정책과 비교하는 것이다(Popple & Leighninger,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비교연구라 할 수 있다. 비교연구는 특정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해 주며, 동일한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얻게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가시켜준다(Rodgers et al., 1979). 비교연구의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제시된다(Higgins, 1981). 첫째, 정책의 일반적인 부분(모든 국가와 정부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부분)과 특수한 부분(특정 상황에 특수하게 해당하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 둘째, 다른 나라와 정부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정책의 선택 범위를 넓혀 준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과의 제도적·사회적·문화적 변수 같은 영향 요소들을 밝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정책을 비교하는 문제 영역별 비교분석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중앙정부, 유사 지방자치단체, 선진국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1] 비교분석의 준거틀



국내외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분석은 국내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며, 연구의 범위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으로는 해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성 증진 정책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둘째, 연구 내용은 선진국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세부 내용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으로 전환 등 정책 발전 과정과 정책기조를 통해 정책방향을 분석하며,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세부 추진정책 등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공간적인 범위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와 수원시를 국내 비교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와 독일을 국가 간 비교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국내외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을 비교분석한다.*

*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안산시(93,792명, 주민수 대비 13.1%)이며, 특례시 중에서는 수원시(66,668명, 주민수 대비 5.5%)의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국내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www.kosis.kr), 외국 사례 대상으로 캐나다와 독일을 선택한 것은 다문화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문화주의를 대안으로 상정한 국가가 캐나다이고, 독일의 다문화정책 또는 사회통합정책의 시작은 이주노동자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와 유사한 상황임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제2절 국내의 다문화수용성 정책 분석

1. 중앙정부

1)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의 발전 과정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서 ‘다양성’과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정책과제에 포함된 2013년으로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이해와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다문화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정책방향을 새롭게 개편하고, 일반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과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관심은 증대되었으나, 역차별 논란과 외국인 혐오증 등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수용 경험이 부족하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수용성 인식 정립의 계기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출신 국가와 인종 등에 대한 부정적·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문화수용성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인권과 다문화, 민원편의 제공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우수한 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의 새로운 정책 분야를 도입하여 기반을 조성하였으나, 인종적·문화적 갈등의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에 「제2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특히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그리고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다양성’과 ‘관용성’이라는 단어의 등장이다. 이는 문화다양성의 강조이자, 다문화수용성의 개념과도 연결된다. 다양한 문화가 한국 사회에 급속하게 유입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비전 | |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
|-----------------------|--|--|
|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 |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
| | 2.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3.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1. 이민자 인권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
| |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철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 |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p. 2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의 세부 내용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를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활성화’,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활용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정책으로는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부처 간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협력체계 구축’, ‘이민자와 국민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세계인의 날 운영’, ‘세계인의 날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추진되었으며,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활용 지원을 위해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63-66).

[표 4-1]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정책목표 | 중심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담당부처 |
|----------------------|--------------------------------|----------------|---|------------------------------|
|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 지역 문화기반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농협 등 이주민 관련 단체가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 소장품을 활용한 감상 및 창작체험,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이주민 자녀 대상 부모나라에 대한 이해 제고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서 일반 국민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확대 - 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문화부, 법무부, 여가부, 농식품부 |
| | | | ■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예비 교원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해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사회 이해 강좌 개설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 | (교과부, 문화부) |
| | | | ■ 부처 간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협력체계 구축 - ABT대학, 박물관, 도서관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사회 포용 분위기 확산 노력 지원 - 문화다양성 인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문화부, 법무부 |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담당부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과 국민 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이주민 풀뿌리 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 내 재능나눔 활동 수행 | 문화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국내발효(2010년 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가칭)」 제정 추진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문화 분야 관련 법 개정 검토 | 문화부 |
| |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중심의 '세계인의 날'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이주민 관련 각종 행사·축제를 '세계인의 날', '세계인 주간'과 연계 강화 -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인 주간' 행사 기획·개발 | 법무부, 행안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의 날'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 마련 - 부처 및 지자체의 이주민과 관련한 연중 행사일정을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www.togetherday.kr)에 게시하고 공익광고 및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한 홍보 일원화 - 한국 사회에 아착을 갖고, 삶에 귀감이 되는 성공한 귀화자들을 홍보대사로 위촉 - 매년 '세계인의 날' 및 '문화다양성 행사' 백서 발간 | 법무부, 문화부, 행안부 |
| | |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활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및 행사 추진으로 공감대 확산 - 방송·미디어 및 문화예술 콘텐츠 등에서의 타문화 존중 및 이해와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안내서 제작·보급 - 방송, 영상, 미디어 분야 등의 콘텐츠 창작자·제작자 대상 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감수성 증진 및 일반시민 참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문화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 - 문화기반시설별(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장르별(연극, 뮤지컬, 영화, 문학 등)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국내외 우수 사례 발굴·공유 및 모델 개발을 통한 보급·활용 - 문화, 교육, 생활 등에서 이주민이 국내 거주에 필요한 다문화 콘텐츠 발굴 및 다문화 책정보 제작 -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공연, 전시, 출판 지원 | 문화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 입력 및 관리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축을 통해 축적된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지원 | 문화부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pp. 63-66 정리.

이와 같은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외국인정책의 기초는 큰 틀이 변하지 않은 채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수립되었으며,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이 핵심가치로 설정되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특히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와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그리고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와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등이 중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만을 강조하던 동화주의에서 탈피하여 상호문화주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이민배경 자격 역량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
|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 관련 국제협력 증진 ■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p. 23.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문화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의 세부 추진정책으로는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를 위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표 4-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담당부처 |
|-----------------------|-------------------|---------------------------|---|---------------|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 ■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집합·원격교육 운영,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교수학습 자료에 문화다양성 및 문화상대주의 관련 내용 개발·보급, 초·중등 교원연수 실시 -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행사에 지역주민·이민자 참여 활성화 - 전국 지역문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
| | | | ■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외국인을 위한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정규 편성 및 다언어 콘텐츠 확대 | 문체부 |
| | | | ■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수집·제작·활용 지원 | 문체부 |
| | | | ■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선정 및 실태조사 시행 | 문체부 |
|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 교육부 |
| | | | ■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민자 등 대상 특성별 맞춤형 교안 개발,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참여형 교육 연수 기획 및 운영 | 문체부 |
| | | | ■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및 선도교사 역량 강화 등 세계시민교육 지속적 확산 | 교육부 |
| | | | ■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자조모임의 문화 예술 활동지원,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 무지개다문화사업 확대 | 문체부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pp. 62-64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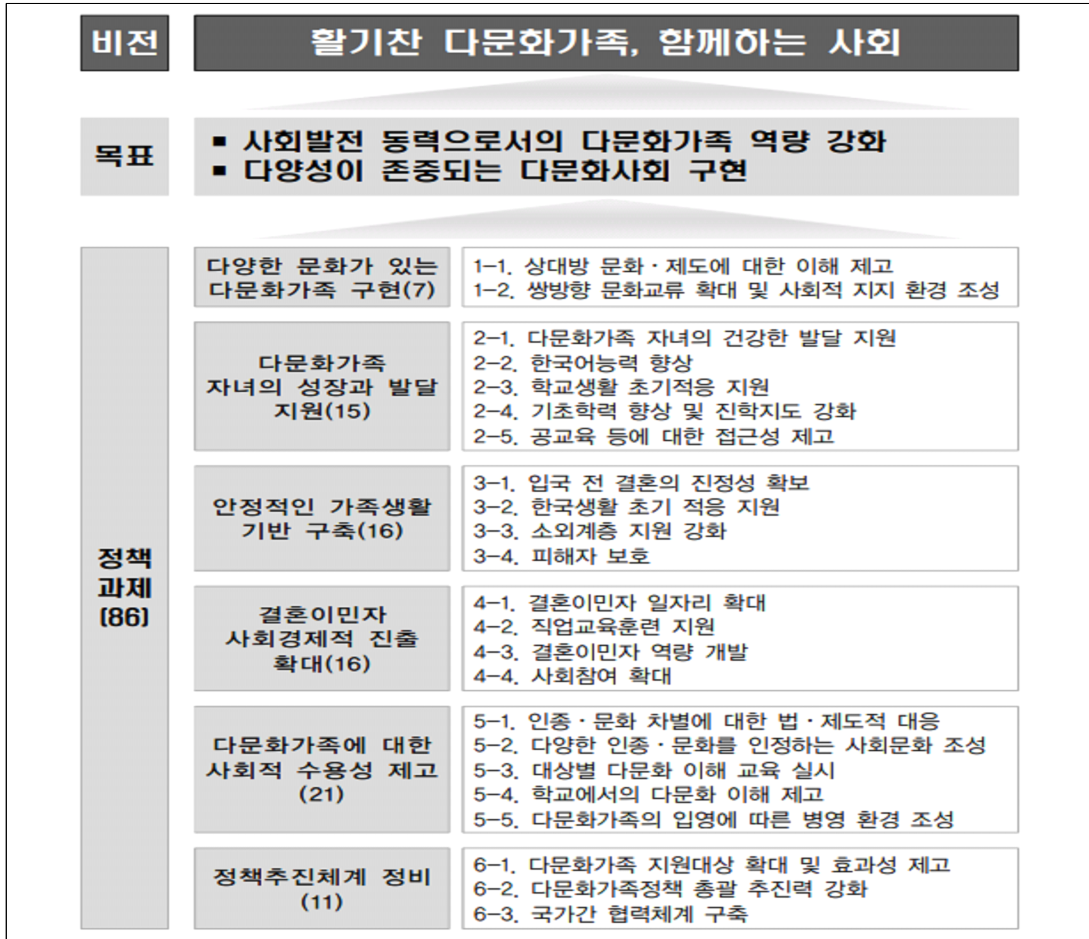
3)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을 정책목표로 수립하였다.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추진과제로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로서 다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데 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일부 국민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다문화사회와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 인식과 감정, 태도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은 직장과 거리, 상점, 음식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이처럼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과 동일시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서로 상대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에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라는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과 달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다양성’과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을 사회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바라보면서 다문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올바른 다문화 이해와 수용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자료: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2~2017)」, p. 26.

이러한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의 세부 내용이다.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을 위해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이처럼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다문화의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된 정책이 전면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 통합 교육 강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추진 및 정책수요 파악’, ‘다문화가족 교육내용 모니터링’을 추진하였다. 쌍방향 문화교육 확대와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을 위해 ‘케이블 다문화방송 추진’,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문화 공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홍보’ 등이 추진되었다.

[표 4-4]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담당부처 |
|----------------------|------------------------------|--|--|----------|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상대방의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간 차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에 관한 부 단위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 가족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정체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 여가부 |
| | |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추진 및 정책수요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혼자 간 결혼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려움, 생활문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책과제 개발 □ 소외계층 중심 특정국가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 여가부 |
| | | 일방향적 한국문화 주입에서 상대방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모니터링 | □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추진 | 여가부, 문화부 |
| |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랑TV에 문화다양성 관련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 케이블 다문화방송 추진 | 문화부 |
| | | | □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의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 문화부 |
| | | | □ 다양한 문화 공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홍보 | 문화부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인종·문화 등 차별에 대한 반·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 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 개선 | □ 차별금지법 마련 | 여가부, 법무부 |
| |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정책강화 법령 및 조항 마련 □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매 3년)하여 현황 모니터링 | 문화부, 여가부 |
| | 다양한 인종·문화를 | 콘텐츠 제작 관계자에 대한 안내서 제작·활용 | □ 타 문화 존중 및 이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문화예술방송영상미디어 분야의 콘텐츠 제작자 등 | 문화부, 방통위 |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담당부처 |
|------|-----------------------|---|--|---------------------|
| |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대상으로 교육 ■ 표현(창작)물에 대한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규정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표현(창작)물에 의한 피해 사례 발생 방지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문화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강화 및 조치 | |
| | |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예산 지속 지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공모사업 중 ‘공공공익성 프로그램 분야’에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선정 확대 | 방통위 |
| | |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자원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추진 | ■ 문화다양성 자료에 대한 체계적 발굴수집보존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 문화부 |
| | |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활용 홍보 | ■ 연령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블로그, SNS, TV프로그램, 캠페인 등 실시 | 여가부, 문화부 |
| | |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 일반국민다문화가족 멘토-멘티 활동, 일반다문화 청소년이 함께하는 봉사활동프로그램 등 지원 | 여가부, 문화부 |
|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교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 체계화 ■ 기존에 개발된 교재나 콘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및 다문화 관련 차별적 요소 시정 ■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문화 분야 전문인력, 교사 등 교육 매개자 및 언론, 기업, 정책 영역 등 핵심 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문화부 |
| | | 17개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58개 과장), 법무연수원 등의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확대 | ■ 지자체경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이민 정책 이해 과정을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확대 | 여가부, 행안부, 법무부 |
| | | 특정 직업계층의 다문화 이해 강의 개설 및 강사 지원 | ■ 경찰교육원 등에 과정(과목) 개설, 교재 및 강사 등 지원 추진 | 여가부, 경찰청 |
| | | 다문화 관련시설 종사자의 다문화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관리자신입직원 등 대상별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기 양성 | 여가부 |
|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 지역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실시 | ■ 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 | 여가부, 문화부, 복지부, 농식품부 |
| | | 일반학생-다문화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 |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외국의 역사와 문화이해, 역할놀이 등)에서 다문화 상호 이해 활동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교과부 |
| | | 다문화교육 내용을 향후 어린이집 | ■ 어린이집유치원(3~5세 연령별 누리과정)부터 초 | 복지부, |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담당부처 |
|------|------|--|---|----------|
| | | 보육프로그램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다문화교육 내용이 범교과 학습요소로 반영 ■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등 교과서 보급 | 교과부, 문화부 |
| | |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 초등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다양성 ■ 교구재 '다문화 꾸러미' 활용을 통해 쌍방향 교류 체험 기회 확대 | 문화부 |
| | | 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선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 | ■ 예비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범대 다문화 이해 강좌 운영 지원 ■ 현직 교원 연수과정을 기초단계(일반교원 권장)에서 심화단계(글로벌 선도학교 교원 필수)로 체계화하여 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 교과부 |

자료: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pp. 31~32, 41~45 정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었다(여성가족부, 2018).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많은 한계가 나타났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교육을 기본적인 소양교육으로 정립하고, 이를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참여와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로 수립되었으며,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과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처럼 제3차 기본계획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문화 조성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4]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비전 |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 |
|------|--|--|
|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 |
| 정책과제 |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
| |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
|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
|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 |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추진체계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

자료: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p. 10.

특히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세부 추진정책으로는 ‘차별적 법·제도 이슈 발굴 및 개선’과 ‘주기적 모니터링 및 환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다문화 이해 교육의 협업 체계 강화’와 ‘유아교육 및 공교육 기관의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정책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과 ‘미디어 모니터

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 그리고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과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운영’, 그리고 ‘문화시설 내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표 4-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담당부처 |
|-------------------------------------|---------------------------------|--|--|--|
|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 인민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 차별적 법제도 이슈 발굴 및 개선 | □ 지역주민 모녀링단 운영(다문화가족 참여회, 자치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내 운영 등)을 통한 차별적 제도 이슈 발굴 및 지속 개선 추진 | 여부, 자치체 |
| | | 주거적 모녀링 및 환류 추진 | □ 다문화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현황에 대한 주거적 모녀링 및 환류 추진 | 여부 |
| |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 부처 간 다문화 이해 교육의 협업 체계 강화 | □ 부처별 다문화 관련 교육(다문화 이해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콘텐츠 및 전문강사 연계 강화 | 여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농림청 |
| | | 유아교육 및 공교육 기관의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 누리과정 및 초·중·고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내용 반영 확대 □ 어린이집 교직원·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교육부, 복지부, 여부 |
| | |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학교현장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 □ 예비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직과목에 반영하도록 권고 □ 다문화 중점학교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및 공유 □ 교원연수, 교사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교육부 |
| |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 □ 기업 학교 단체 등에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온라인 다문화 이해 교육 운영, 대상(경찰, 군인 등)별 특성에 맞는 교육콘텐츠 개발 | 여부 |
| | | 대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등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교육 활성화 □ 다문화 장애인의 군복무 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추진 및 부대 내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여부, 행안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복지부, 자치체 |
| |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 방송심의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인민 및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차별적 요소를 사정하기 위한 심의 기능 강화 | 방통위 |
| |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 □ 다문화 방송 프로그램(BBS) 제작 지원 □ 콘텐츠 제작 지원 시 반차별 인문관점에서 제작을 유도하는 | 방통위, 문체부 |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담당부처 |
|------|-------------------------|----------------------------------|--|--------------------|
| | | 가이드라인제공 | 가이드라인 제공 | 여가부 |
| | |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 및 개선 사례 발굴 | ■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선 필요사항 상의 요청 | |
| | |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다각화 | ■ 언론 및 민간단체와 함께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및 활동 전개, 공모프로그램 및 캠페인 추진 | 여가부, 문체부 |
| |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사회 다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 지역사회 다문화 우수 프로그램 발굴 포상,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발굴 확산 | 여가부, 지자체 |
| | | 다문화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발굴 운영 | ■ 이주민·선주민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무지개다사(무지개다문화사업) 등 발굴 및 운영 ■ 생방향 교류체험 프로그램(다문화귀래미 등) 개발 및 운영 ■ 농촌지역 내 다문화 공존을 위한 자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농진청 |
| |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내에서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 ■ 도서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박물관 내 이주민 문화 체험 시설 등 조성 및 전시, 미술관 내 제씨계 전시회 등 다문화 작품 전시 확대 | 문체부 |

자료: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pp. 22-24 정리.

2. 경기도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경기도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가평군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다문화 체험주간 행사 운영, 시흥시는 결혼이민자 한국 사회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지역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문화시설 내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도서관 내 서가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군의 경우, 이천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추석맞이 어울마당 행사 운영, 부천시 등 15개 시·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군포시 등 4개 시·군은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운영

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세계 명절 축제를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수원시는 문화시설 내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수용성 정책 및 사업

| 정책영역 | 정책구분 | 세부과제 | 소관 자치단체 |
|-------------------------------------|------------------------------|---|------------------|
|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 경기도 |
| | |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 |
| |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 용인시 |
| | | 다문화 체험주간 행사 운영 | 광주시 |
| | | 경기북부 다문화 소통프로그램 지원 | 경기도 |
| | |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이해 증진 | 시흥시 |
| | 지역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 가평군 |
| |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추석맞이 어울마당 | 이천시 |
| |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 | 부천시 등 15개 시·군 |
| | |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 고양시 |
| |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 군포시 등 4개 시·군 |
| | | 세계명절 축제(다문화 인식개선) | 화성시 |
| | | 다문화 도서 구입 | 광주시 |
| | | 도서관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책으로 모여요! 다같이, 다가치) | 광주시 |
| | | 문화시설 내 다문화 프로그램 확대 (도내 도서관 내 다문화서가 만들기) | 경기도 |
| | | 문화시설 내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 수원시 |
| |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다문화 스토리텔러' 양성 | 여주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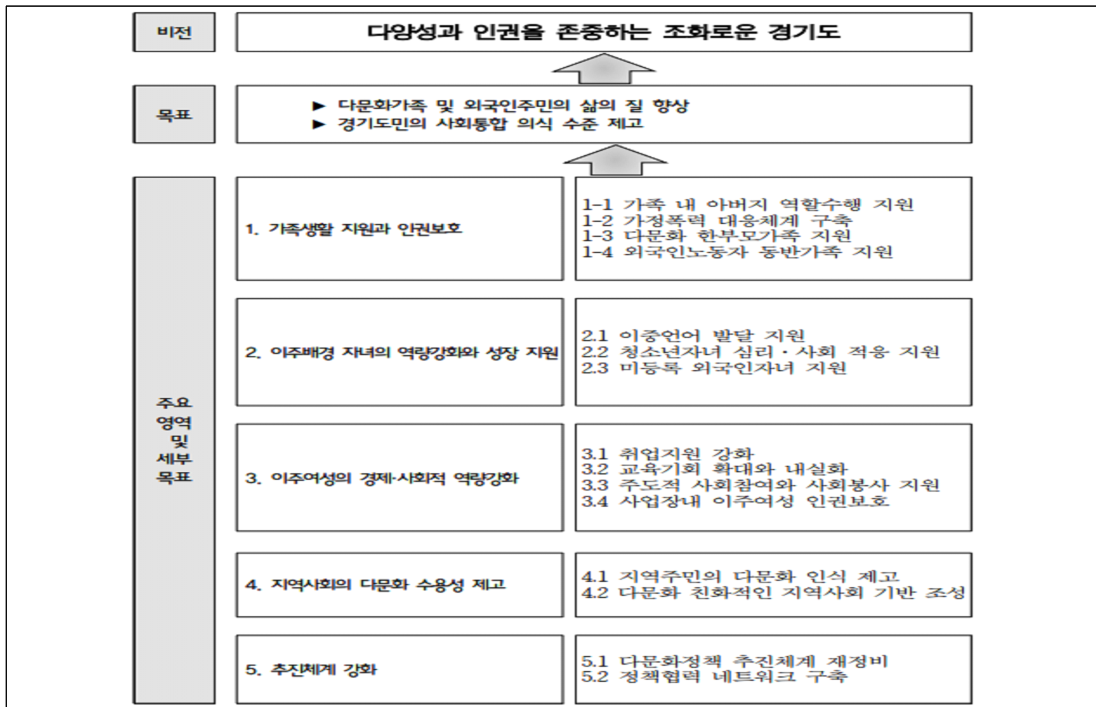
2)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에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경기도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 (2019~2023)」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은 제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큰 틀과 주요 내용을 반영하되,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경기도’로 설정하면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 다문화사회의 다양성과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경기도가 가진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성과 인권의 존중 그리고 조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든 주민이 다문화사회의 주체가 되어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웃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지원,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사회통합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통해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4-5]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자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8),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 수립 연구, p. 105.

특히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제고’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 조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다문화 이해 교육 콘텐츠 개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관리’, ‘다문화 이해 교육 대상 확대’, ‘외국인주민 참여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다문화친화 거리 조성’과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개발’, ‘관공서 다국어 표기 병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은 이주민과 교류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상호 교류 경험이 많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고정화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사회가 이주민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다문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서로 동등한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7]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에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주요 추진과제 | 세부 추진정책 |
|------------------------|------------------------------|----------------------|--|
|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 성 제고 |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 | 다문화 이해 교육 콘텐츠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형 다문화 이해 교육 교재 개발 ■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 | |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뱅크 구성 ■ 강사 보수교육 실시 |
| | | 다문화 이해 교육의 대상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수강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보육교직원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
| | | 외국인주민 참여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
| |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 기반 조성 | 다문화 친화 거리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재생계획의 일환 다문화 친화 거리 조성 ■ 도시 재생계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추진 |
| | | 외국인 및 다문화정책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생활실태 조사 ■ 사회적 차별과 사회통합 조사 |
| | | 관공서 다국어 표기 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 시청, 구청, 주민센터와 기타 공공시설의 간판에 다국어 병행 표기 ■ 시중 은행, 소포털 등 편의시설에도 다국어 병행 표기 확충 |

자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8),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 수립 연구, pp. 174-184 정리.

3. 안산시

1) 안산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안산시는 2022년 현재 30,000여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언어소통과 자녀교육, 경제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산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인주민도 내국인주민과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잘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산시의 지원 전달 행정기관이다(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홈페이지, <https://www.ansan.go.kr/global/main/main.do>).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에 따른 방문교육과 가족체험, 사례관리와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는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주민이 서로 통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상호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반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제정·운영,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지정·운영, 안산시 거주 외국인민 간협의회 구성·운영, 외국인주민공동체 대표자 회의 운영,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안산시가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교류협정 체결, 다문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운영,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보건소 무료 진료와 함께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 지원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체 소식지, 생활가이드북을 발간함으로써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문화탐방과 태권도, 배드민턴 등 생활 체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글로벌청

소년센터를 통해 방문교육사업(한국어, 아동양육 서비스 등)과 함께 취업과 가족교육, 자녀학습 지원,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다문화 이해 증진이다. 다문화축제와 국가별 문화축제,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다문화이해 교육,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 간 다양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4-8] 안산시 다문화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반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운영 ▣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운영 ▣ 안산시 거주 외국인민간협의회 구성·운영 ▣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환경 개선 ▣ 외국인주민공동체 대표자 회의 운영 |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교류협정 체결 ▣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다문화지원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운영 |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적응 및 정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 공동체 소식지, 생활가이드 북을 통한 생활 정보 제공 ▣ 한국문화탐방 ▣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 지원 ▣ 한국어, 아동양육 서비스 등 방문교육사업 ▣ 취업, 가족교육, 상담지원, 자녀학습 지원 |
| 다문화 공동체 형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축제 ▣ 국가공동체 페스티벌 ▣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 세계인의 날 ▣ 국가별 문화축제 ▣ 다문화이해 교육 |

2) 안산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산시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공동체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연대를 강화하여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내국인 주민들에게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향후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의 국가별 공동체 간담회와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사업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국가별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며, 주한 대사관과 연계한 안산(원곡동)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체육행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표 4-9] 국가별 공동체 행사 및 축제 개최 현황(2018~2019)

| 사업명 | 참여자 | 추진실적 (2018~2019) | 비고 |
|-------|--------------------------------|------------------|--|
| 문화행사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내국인 주민 등 | 24회, 17,700여명 |  |
| 체육행사 |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내국인 주민 등 | 10회, 5,500여명 |  |
| 힐링콘서트 | 다문화마을특구 내 문화공연 | 19회, 3,900여명 |  |

□ 주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그림 자료: 안산시(2020), 안산시 시정백서(2018~2019), p. 406.

안산시는 재한 외국인 간 문화적 소통을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퍼레이드와 퍼포먼스, 전통공연 등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구성과 함께 단순 공연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외국인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안산시는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한 구성을 통해 축제 참여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대시키고, 각국 공동체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과 협업체 다양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인의 날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표 4-10]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현황(2018~2019)

| 추진내용 | 장소 | 참여인원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식, 강강술래 퍼포먼스 ■ 세계 전통의상 퍼레이드, 전통혼례 체험 ■ 세계 문화체험 및 음식부스 운영 등 |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 4,000여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식, 붓 드로잉 퍼포먼스 ■ 다문화시민대상 시상, 나라별 전통공연 ■ 세계 문화체험 및 음식부스 운영 등 | 안산 문화광장 | 1,000여명 |  |
| ■ 주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 | | |

그림 자료: 안산시(2020), 안산시 시정백서(2018~2019), p. 408.

안산시는 국가별 문화의 다양성을 활용한 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쟁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별 대표 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축제 개최를 통해 외국인주민은 자국 문화의 향수와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내국인 주민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축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안산시는 지속적인 개최가 가능하며 수준 높은 국가별 문화축제를 발굴하여 안산시의 상징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체,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 주한 대사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표 4-11] 국가별 문화 축제 개최 현황(2018~2019)

| 구분 | 축제 | 내용 | 참여인원 | 비고 |
|-------|----------------------|----------|---------|--|
| 2018년 | ▣ 캄보디아 쏘츠남 축제 | 전통 문화 축제 | 500여명 |  |
| | ▣ 방글라데시 문화교류 축제 | 전통 문화 축제 | 500여명 | |
| | ▣ 제회 안산컵 국제 친선 태권도대회 | 스포츠 교류 | 600여명 | |
| 2019년 | ▣ 캄보디아 쏘츠남 축제 | 전통 문화 축제 | 5,000여명 |  |
| | ▣ 인도네시아 끈두리 축제 | 공연·음악 축제 | 1,500여명 | |
| | ▣ 제회 안산컵 국제 친선 태권도대회 | 스포츠 교류 | 1,500여명 | |

▣ 주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그림 자료: 안산시(2020). 안산시 시장백서(2018~2019), p. 409.

안산시는 ‘다양한 문화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이에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모두가 문화다양성을 인정·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추진하고 있다. 2018~2019년 총 492회, 13,200여 명에게 눈높이 맞춤형 이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유치원과 학교로 찾아가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를 넓혔으며, 외국어 회화 동아리를 운영하여 외국인·내국인이 함께 외국어를 배우면서 서로의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와 더불어 생생·세계문화체험교육을 통하여 안산시 공무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안산시의 ‘다양한 문화 이해 교육’은 다양한 계층별로 눈높이 맞춤교육을 통해 모두가 상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문화강사로 활동하여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향후 안산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존중하며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표 4-12] 다양한 문화 이해 교육 운영 현황(2018~2019)

| 구분 | 대상 | 운영실적 | | 비고 |
|-----------------------------|---------------------------|--------------|--------------|--|
| | | 2019년 | 2018년 | |
| 찾아가는 유치원 다문화체험 | 유치원생 | 54회, 738명 | 51회, 920명 |  |
| 찾아가는 다문화체험 일일교실 | 중·고등학생 | 130회, 3,192명 | 130회, 3,711명 | |
| 방학 다문화 체험캠프 | 초등학생 | 12회, 329명 | 9회, 264명 | |
| 찾아가는 다문화인식개선 인형극 체험 | 초등학생 | 1회, 1,981명 | - | |
| 대학생 다문화 이해 교육 | 대학생 | 1회, 125명 | - |  |
| 찾아가는 시민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 도서관,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 30회, 699명 | 26회, 583명 | |
| 외국어 회화동아리 Cafe 운영 | 일반시민 | 11회, 150명 | 24회, 360명 | |
|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생생 세계문화체험교육 | 공무원 | 2회, 54명 | 1회, 70명 | |

□ 주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그림 자료: 안산시(2020), 안산시 시장백서(2018~2019), p. 412.

4. 수원시

1)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2019년)

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외국인·다문화가족이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수원시정연구원, 2020),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목표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함께하는 건전한 다문화 도시 조성’, ‘이주배경 청소년 역량 강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라는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4-6]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자료: 수원시정연구원(2020).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연구, p. 42.

다문화수용성 증진과 관련된 정책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의 자립 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라는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확대’가 관련되어 있다. 4대 정책목표가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정책방향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국인·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은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확대’에서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목적이 있어 사회의 수용성보다는 외국인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정책목표별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사업

| 정책목표 | 중점과제 | 세부 추진사업 |
|----------------------|-----------------------------|--|
| 함께하는 건전한 다문화도시 조성 | 상생·발전하는 다문화 정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 다문화·외국인주민 후원자 결연사업 확대 추진 □ 소확행, 전지적 참견 시장에서 □ “참여로 만드는 글로벌 사회” 토론 추진 |
|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외국인 정책자문·심의위원회 운영 □ 민·관 협의를 통한 소통의 장 활성화 □ 체감형 정책추진을 위한 리스트 업 추진 |
| 이주배경 청소년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확대 □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 □ 다문화 멘토링 봉사나눔 운영 |
| | 맞춤형교육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확대 □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운영 |
|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책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무지개 상담실 운영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 외국인주민 도전 골든벨 |
|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족환경 조성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 | 외국인주민의 자립 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원 □ 외국인주민 한국 문화 체험의 장 마련 □ 외국인주민 봉사단 운영 |
| |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책지원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소비생활 피해 예방 협약 □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구재 보급 사업 □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확대 □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

자료: 수원시정연구원(2020),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연구, p. 43.

2) 수원시 외국인주민지원 세부 추진 계획(2019년)

경기도 수원시는 외국인주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정착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차

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정책목표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내국인과 동일한 외국인지원 정책 수립’, ‘인권과 문화다양성 존중으로 시혜적인 외국인주민 육성’으로 설정하였다(수원시정연구원, 2020). 이러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복한 삶이 있는 안정적 정착’, ‘자립 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인권과 문화다양성 존중’, ‘다함께 하는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4-7]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세부추진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 | |
|---------------------|---|
| 비 전 | 차별없이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수원 |
| 목 표 |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내국인과 동일한 외국인지원 정책 수립 인권과 문화다양성 존중으로 시혜적인 외국인주민 육성 |
| 역점과제 | 중점 추진과제 |
| 행복한 삶이 있는 안정적 정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기본생활 보장 지원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확대 운영 ▶ 외국인 동등한 일자리 여건 마련 ▶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조성 |
| 자립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자립역량 교육 확대 실시 ▶ 지역사회 시혜적 인적자원 육성 ▶ 자긍심고취 다양한 이벤트 마련 |
| 인권과 문화다양성 존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강화 ▶ 다문화 어울림 수용성 확대 ▶ 외국인주민 취약계층 대책 마련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
| 다함께 하는 협업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지원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모니터링 강화 피드백 구축 ▶ SNS 홍보 및 홍보요원 육성 |

자료: 수원시정연구원(2020).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연구, p. 44.

경기도 수원시는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52개의 세부추진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중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인권과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확대 실시’, ‘국제자매도시의 날 개최’, ‘다문화 도서관 운영’ 등이 있다.

[표 4-14]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역점과제별 세부추진사업

| 역점과제 | 세부추진사업 | 역점과제 | 세부추진사업 |
|---------------------|--------------------------|-------------------|---------------------------|
| 행복한 삶이 있는 안정적 정착 지원 |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위탁 운영 | 자립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 ▣ 외국인·다문화가족 수원방문 관광 할인 운영 |
| |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 | ▣ 사군과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요리교실 |
| |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위탁 운영 | | ▣ 다문화 도서관 운영 |
| | ▣ 다문화가족 '무지개 상담실' 운영 | | ▣ 다문화 도서 확충 |
| | ▣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족환경 조성 | | ▣ 국제저소득도시 조사사 초청 음식전 |
| | ▣ 외국인주민 상담 운영 | | ▣ 외국인주민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
| | ▣ 재수원 외국인교민회 운영 | |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확대 |
| |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 | ▣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 사회 조기 적응 지원 |
| | ▣ 이주민 상담활동가 사례 관리 강화 | |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운영 |
| | ▣ 외국인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 | ▣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
| |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 | ▣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 |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 | ▣ 외국인주민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실시 |
| | ▣ 시민의 마음을 돌보는 마음건강상담실 운영 | | ▣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 운영 |
| | ▣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 | ▣ 함께하는 나눔장터 운영 |
| | ▣ 다문화가정 출산준비교실 | 다함께 하는 협업 추진체계 구축 | ▣ 외국인자원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 | ▣ 긴급지원사업 | |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 |
| | ▣ 폭력피해여성 일시지원시설 운영 | | ▣ 다문화외국인 정책추진 심의 위원회 운영 |
| 인권과 문화다양성 존중 | ▣ 외국인 노동자 노동법 교육 및 상담 | | ▣ 이주민과 함께 만드는 동물 마일공동체 |
| | ▣ 외국인주민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 ▣ SWQIC 한국어교실 운영 |
| | ▣ 외국인·다문화가족 등 한국어교실 운영 | | ▣ SWQIC 한국문화테이 운영 |
| |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및 문화교실 | | ▣ 해외유수인재유치사업 |
| | ▣ 외국인주민 한국문화 체험 및 문화교육 | | ▣ 수원권 대학교 국제교류협의회 |
| | ▣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 | ▣ 글로벌 창업스쿨 |
| | ▣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확대 실시 | | ▣ 사회통합프로그램 |
| | ▣ 국제저소득도시의 날 개최 | | ▣ 조기적응프로그램 |
| | ▣ 외국인 유학생 수원시 관광투어 초청 | | ▣ 국제결혼인사프로그램 |

자료: 수원시정연구원(2020).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연구, pp. 45~46.

3) 수원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수원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며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2년에 개최된 제13회 다문화한 가족축제는 주최기관으로 수원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주관기관으로 수원시외국인복

지센터가 행사를 개최하였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비롯한 수원시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하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였다. 축제에서는 한국 전통의상과 세계 민족의상 패션쇼 영상을 공개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사업 발전 유공자·모범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특히 다문화 특별 퍼포먼스에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패널 40명과 현장 참여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였다. 그 밖에도 20여 개국을 선정하여 대표 음식을 소개하는 세계음식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수원시청은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른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여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원어민 강사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지역 내 학교와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시민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필리핀, 몽골 등 11개국의 의복과 풍습 그리고 교육, 놀이, 제도 등 전통문화 교육, 다문화사회와 가정 이해하기, 재외동포 이해하기, 문화다양성 이해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강사 간담회와 맞춤형 전문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체계화·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국제자매도시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자매우호도시 공연단을 초청하여 전통공연을 통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자매도시의 밤’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중국 ‘항저우강남사죽남송악무전습원’과 루마니아 민속무용단 ‘마티소를’, 터키 전통무용단, 독일 구트만 무용학원, 베트남 문화예술공연단이 참여하여 각국의 전통과 문화가 결합된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를 수원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시키면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시민과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3절 외국의 다문화수용성 정책 분석

1. 캐나다

1) 다문화수용성 정책의 방향

캐나다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OECD의 국제이주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2017년 한 해 동안 28만 6,000여 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1%가 외국 출생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9). 이와 같은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캐나다는 이민자와 공존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사회통합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아 왔다.

캐나다에서는 사회통합을 이민자와 캐나다 사회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양방향 프로세스로 보고 있다(CIC, 2010). 이민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안인 「이민자 및 난민보호법(IRPA)」에서는 ‘이민자의 캐나다 사회로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민자와 캐나다 사회 모두의 상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CIC, 2010). 이는 그동안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캐나다 사회의 가치와 관습, 권리, 의무 등을 이해하고, 캐나다 사회는 이민자의 다양한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성장하는 양방향적인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는 양방향 사회통합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민자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개편을 추구하는 현대화 노선(modernized approach)을 추진하였다(CIC, 2010).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은 정보, 오리엔테이션, 언어·기술의 향상, 노동시장 참여, 지역사회 연계, 요구 파악과 타 기관 연계, 지원 서비스 등 6개 세부 주제로 재편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는 지역사회 내의 도서관, 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정착 상담원을 배치하고 이들이 이민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적합한 기관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Glass & Sheffield, 2008), 지역사회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이니셔티브인 ‘지역이민협의체(LIPs: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를 설립·운영하고 있다(Prince, 2019).

2) 다문화수용성 정책

캐나다의 다문화수용성 정책은 초기부터 다문화정책에 근거한 개방성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캐나다는 과거 인디언 원주민 차별정책 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갈등 해소 같은 상호문화적인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있다. 헌법에 ‘권리와 자유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다문화 유산을 규정하였으며, ‘다문화주의법’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문화 유산을 보호, 증진하는 실행 법률을 제정하였다.

특히 프랑스인 인구 비율이 높은 퀘벡주에서는 공존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신규 이주민의 사회적 포용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 다양성법과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이주민에게 출신국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수 그룹의 통합프로그램 참여도를 증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존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퀘벡주는 ‘문화 어젠다 21’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역이민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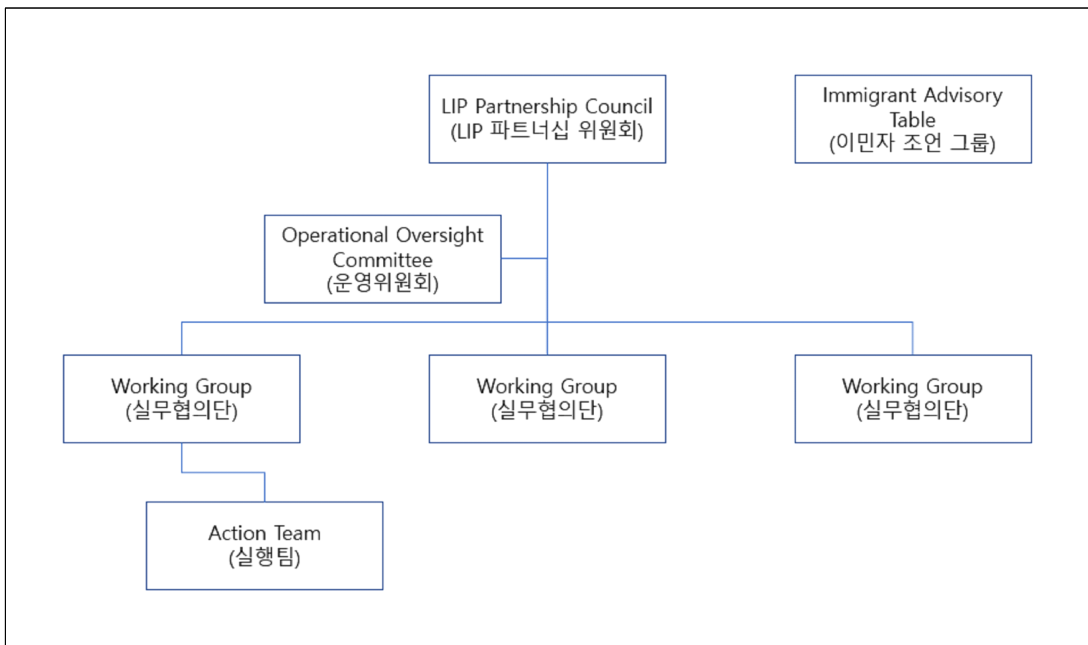
지역이민협의체는 2008년 캐나다 이민부 지원으로 온타리오주에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캐나다 전역에 80개 이상이 있다. 지역이민협의체는 다양한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주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 당사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을 아우르는 포괄적·다층적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CIC, 2014).

지역이민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Prince, 2019). 첫째, 이민자와

관련된 정착 서비스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사회의 공공부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민자의 사회통합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둘째, 지역이민협의체는 시정부, 지역사회, 공공기관, 기업, 고용주 등 이민자 정착과 관련된 새로운 당사자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고용, 주거, 의료, 교육 등 캐나다 공공부조 서비스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인 웰빙 수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비스 체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이민자의 욕구가 지역사회 개발계획 과정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우선순위를 파악하며, 이민자를 위한 포용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이민협의체는 이민 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마다 조직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원이 참여하여 협의체를 이루고 있다(Cape Breton Partnership, 2017).

[그림 4-8] 캐나다 지역이민협의체(LIPs) 조직 구성



지역이민협의체에는 정부를 포함한 지역사회 내 주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LIP 파트너십위원회(LIP Partnership Council)가 설치되어 있다. LIP 파트너십위원회에 다양한 배경의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LIP 파트너십위원회에는 정착 지원기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학교, 고용시장 관계자, 병원과 의료기관 종사자, 이민자, 대학, 시민사회단체, 경찰, 인종단체와 종교단체, 미디어, 민간 영역 대표 등 다양한 단체가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다(CIC, 2014). 그 밖에도 주거단체와 여성단체, 노인 단체, 아동과 청소년 단체, 개인 봉사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지역이민협의체의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LIP 파트너십위원회의 주요 임무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의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이다(Prince, 2019). 전략계획에는 지역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인구학적·지리적 정보, 비전, 의제 간의 우선순위, 구체적인 실행계획, 주요 활동과 파트너, 예산, 기대되는 결과, 모니터링, 평가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rince, 2019).

지역이민협의체에는 운영위원회(Operational Oversight Committee)가 설치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산하 위원회나 실무협의단의 대표자로 구성되고, 산하 위원회 또는 실무협의단, LIP 파트너십위원회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이민협의체에는 이민자의 건강, 이주 배경 청소년, 사회통합, 정착 같은 특별한 주제에 관한 산하 위원회나 실무협의단(working group)이 설치되어 있다(Prince, 2019). 개별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분야의 실무협의단이 운영되고 있다. 실무협의단은 관련 사안의 권고안을 LIP 파트너십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실무협의단 산하에는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팀(Action Team)이 설치되어 있다(Prince, 2019).

대부분의 지역이민협의체에는 이민자 요구 파악과 정책 사각지대 분석 등에 이민자 조언 그룹(IAT: Immigrant Advisory Table)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이민협의체는 이민자의 출신 국가와 이민 기간, 연령층, 사회 계층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민자 조언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Immigrant Advisory

Table, 2018). 개별 이민자가 LIP 파트너십위원회에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지만, 이민자 조업 그룹은 좀더 조직화된 차원에서 이민자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15] 캐나다 다문화수용성 정책

| 배경 | 성격 | 특징 | 정책추진기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제와 이민자의 국가 ■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류사회 ■ 인디언 원주민 2% ■ 공업국으로의 전환을 통한 노동력 필요 ■ 경제이민 활성화 ■ 유색인종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인종다민족 문화, 이민자의 평등한 대우 추구 ■ 공존과 조화 기반 ■ 이주정책에서 다문화정책으로 전환 ■ 노동력 확보 ■ 영불 이중언어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인 중심 동화정책에서 이민자의 고유 민족성과 다양성 인정 ■ 상호문화 교류증진 정책 ■ 다문화사회 모범국 ■ 연방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 및 기금지원 ■ 시민단체의 문화다양성 활동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다문화주의 법 제정 및 이민부 개편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 실행기관인 시민단체와의 협업 활성화 ■ 공공부문과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체제 확립 ■ 국가-시민단체-기업 거버넌스 체제로 확대 개편 |

2. 독일

1) 다문화수용성 정책방향

독일 내 외국 배경의 이주민은 독일 통일 당시 약 590만 명에서 2014년에는 전체 인구의 20%인 1,641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1년에 비해 150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이주민은 독일 자국민과 동일한 정치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거주지,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2000년 ‘시민권’, 2005년 「이민법」 개혁을 통하여 이민국가로서 정치적 조치를 추진하였다.

독일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다양한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이주민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후 1950년대 동유럽에 살고 있던 수백만 명의 독일계 주민이 대거 이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당시 새로 유입된 독일계 실향민은 상이한 생활문화와 사회적인 관습의 격차를 경험하게 되었고, 기존 주민 간 문화 갈등이 표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내부 통합을 이루어야 했던 과정에서 독일 이주동포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통

합 문제가 정책적으로 이슈화가 되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독과 서독의 분리는 사회체제와 생활양식, 가치관까지도 양분화하였고, 국민의 정서와 가치, 의식도 달랐다. 이 시기에는 사회구성원의 문화적인 이질성을 극복하고, 생활문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였다. 이후 국제경제시장과 노동력의 필요성에 따라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로 이주하게 되었다. 낮은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독일 정부는 폭넓은 다문화사회 관점과 유연한 사고를 확대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주정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과 재정 투입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수자 그룹의 참여와 독립적인 조직 운영 같은 문화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통합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중심 주제는 ‘일자리’, ‘고용시장’, ‘자격증’, ‘언어’, ‘이주민사회의 건강권’이었다. 특히 사회통합 수뇌 회담에서 문화다양성 전국연방위원회는 ‘상호문화 대화와 다양성’에 관한 연석회의를 주재하였다(김면, 2017). 다른 실행기관은 독일 사회통합과 이주를 위한 전문가회의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독립기구로서 7개 재단이 참여하고 있다(김면, 2017). 이 기관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도시 내 문화다양성’, ‘슈투트가르트 문화다양성 촉진활동’, ‘연방차원의 국가 사회통합 계획’, ‘쾰른 매력’, ‘상호문화 통합 리포트, 뮌헨의 다양성 삶’, ‘상호문화활동’, ‘국가 사회통합 활동계획’을 제시하였다.

연방정부 내각에는 이주와 피난, 사회통합 분야의 장관직을 두고 있으며, 주요 통합 계획에는 학교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상호문화 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7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소수자그룹의 문화 권리 증진을 위해 연방 차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상호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확대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참여하고 있다. 상이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전통적인 교육제도는 수정·보완되었다.

2) 문화예술을 통한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

독일은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독일 사회의 국가적,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포괄적인 소속감을 구축하며, 상호 소통을 이루고자 한다. 독일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연관 없이 개별적으로 병렬하기보다는 인권과 자유, 관용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적, 교육적, 초국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이 창의성과 혁신, 독일사회의 번영을 위한 원천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적 교류협력을 촉진시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상호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권 간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지역과 글로벌 파트너로서 문화예술 분야와 기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간 문화교류와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환경 변화 속에서도 독일 사회 내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자로서 독일 번영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인 격차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연방정부의 다문화수용성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인프라와 예술정책 지원을 통해 상호 공존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은 ‘문화의 등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23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문화진흥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문화미디어행정부(BKM)와 주정부의 문화부장관상설회의는 다양한 문화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교류프로그램인 ‘문화가 세계를 열다’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폭을 넓히는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미디어행정부 산하 세계문화의 집은 관련 사업을 총괄, 홍보하고 있다. 세계문화의 집은 베를린에 위치하며, 유럽을 제외한 주로 비유럽권 제3세계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전시관이다. 다양한 문화권 소개와 함께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문화 협력 강화와 비서구권 소수민족의 이질적인 타문화 체험을 통하여 자국민에게 다문화수용성 의식을 증진하고, 사회적 기반 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독일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당신이 독일이야’ 캠페인은 11개 채널에서 TV 광고가 이루어졌고, 44개 매거진과 21개 신문에 캠페인 내용이 실렸다. 이를 통해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독일 내 대중적인 관심을 높이면서 독일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는 효과를 보았다(최보연, 2016). ‘당신이 독일이야’ 캠페인은 다른 피부색과 출신지, 종교, 문화적 배경 등을 지녔으나, 독일 사회 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강조하고, 모두가 함께 독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감성적으로 담고 있다.

[표 4-16] 독일 다문화수용성 정책

| 배경 | 성격 | 특징 | 정책추진기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독일계 실향민 대량 이주 ■ 1990년 독일 통일 ■ 외국인 노동자 지속적 유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 중 초청노동자, 독일실향민, 난민 등 이주민 비율 20% ■ 독일 통일 이후 내적 통합 정책 추진 및 정책지원 ■ 혈통주의 및 자민족 우선과 다문화 정책 논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 및 주정부 내 부처 간 협력, 재정 투입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 운영 ■ 문화통합을 위한 문화등대 운영 ■ 문화미디어행정부(BKM) 산하 세계문화의 집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가 각 부처에 다양성 정책 역할 분담 ■ 문화지원정책을 통한 문화소의 해소 및 내적 통합 |

제4절 시사점

정책의 비교분석 방법론은 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지향점 설정과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정책과 부합도를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유사 기초자치단체의 사례와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다문화수용성 증진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적 개선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이러한 점에서 고양시의 효과성 있는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경기도), 기초자치단체(안산시, 수원시) 그리고 해외 선진국(캐나다,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등의 안정적인 주류사회 적응과 지원을 강조하던 기존 내국인 중심 사회통합정책에서 사회의 수용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대상을 분리하여 외국인은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지원, 내국인은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분리되어 다문화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는 많은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산시와 수원시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다문화수용성 증진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 같은 만남의 장은 상호 다른 문화를 알리고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수용성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문화증대사업을 통해 이질적인 문화를 보유한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고, 캐나다는 원주민과 이주민, 프랑스계와 영국계 간의 소수민족집단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내국인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고, 외국인과 다문화에 관한 전형화된 선입견이 미디어라는 매체에 한정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직접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향후 일상생활에서도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접점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자신을 상대방의 관점에 위치시켜 소수자를 향한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은 다양한 문화예술 매개체를 통해 소수자 편견을 없애고, 상호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예술정책을 접목하여 사회 내의 국가적·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소통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은 기존의 ‘다문화’에서 ‘다문화 존중’과 ‘다양성’으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물리는 것이며, 사회 내의 다문화수용성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교육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 정책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수용성 자체가 사람의 사고와 인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교육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등은 일회성으로 그칠 경우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으나, 3회 이상 지속하게 되면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아동기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 대상별 다문화수용성 교육을 다양화·활성화하면 정책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참가자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이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다문화수용성 향상 방안

제1절 제도적 개선 방안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제절 제도적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결과와 일반 국민 간 비교분석 결과,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수용성 증진 방안은 크게 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고양시의 다문화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선언적 의미로서 ‘고양시민의 책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이 조례에서는 ‘시장의 책무’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양시장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문화주의는 주류집단 또는 지배문화구성원으로 표현되는 원주민이 이민문화의 인정을 넘어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 가능한 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양시민의 책무를 이 조례에 규정하여 고양시민이 외국인주민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책무 또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그 시작과 과정이 어떻든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특히 고양시에서 삶을 선택하였고, 한국 문화의 상호작용에 따른 문화적 변용과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개인차는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양호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간 원만한 관계 형성과 문화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인주민의 이와 같은 노력과 연계되어야만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과 의지를 선언적 의미로서 이 조례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고양시의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다문화사회의 일

부 구성원만을 정책 대상으로 상정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나 향후 정책 대상자를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상생적 다문화사회 구현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규정한 제도로 개정이 요청된다.

둘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와 제5조의2에 근거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정책의 수혜자는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단위 기능 또는 부서 중심이 아닌 해당 정책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증진 대상자인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 문화 적응 대상자인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교육과 홍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기회 제공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가해야 한다.

셋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고양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와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주요 정책 수혜자(외국인주민과 고양시민, 고양시 공무원) 중심으로 확장하고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조사 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양시의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단초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외국인복지센터(현재 이민자통합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증대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근거 법률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나 양자 간 기능적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적 개선 방안

앞서 제시한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과 함께 고양시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양시민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수적이다. 현행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에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한정되어 있으며, 고양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고양시 평생학습 진흥계획’을 비롯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이주민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궁극적인 다문화사회의 구현이라 한다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회의 다문화수용성은 반드시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의무교육과정에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이해 교육의 포함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고양시민의 다문화수용성과 외국인주민의 문화적응 수준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양시민과 외국인주민 간의 접촉을 통한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양시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기념식, 국제교류행사 등을 1주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발성 사업으로는 고양시민과 외국인주민 간의 교류 활동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자 간 만남과 교류를 위한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예술정책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연계는 소수자 편견을 줄이고, 국가적·지역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양시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에 다문화사회 구현 또는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상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의 극대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주민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주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주 지역 공동체의 인정은 양호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역 또는 주요 활동지역(행정동 단위)에서 외국인주민이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와 사업적 연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다문화사회 관련 활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외국인주민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동의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부여하여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기정·변미희(20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 37-51.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8).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 수립 연구」. 정책보고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0). 「경기도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20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 김상민·이소영(2017).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이혼율 저감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혜·박재규(2018). 경기도 다문화정책 기본계획(2019~2023)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옥순(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유경·조애저·최현마·이주연(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이선·최윤정·윤지소·이재경·문희영·이명진·양계민(20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김이선 외(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 김정현(2017).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차이에 대한 한 해석: 찰스
테일러의 견해를 중심으로”, 『코기토(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통권 82호 : 70-99.
- 김태원(2012).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유럽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탐색”, 『유럽사회문화』, 통권9 :

179-214.

김창근(2015). “상호문화주의의 원리와 과제: 다문화주의의 대체인가 보완인가?”, 『윤리연구』, 통권 103호 : 183-214.

민무숙·안상수·김이선·선보영·이명진(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여성가족부.

민무숙 외(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박진경(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 259-289.

박진경·원숙연(2010).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보』, 44(3) : 191-217.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백승대·안태준(2013). “국민정체성이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정치학회보』, 21(2) : 1-24.

안산시(2020). 안산시 시정백서(2018~2019), 안산시

안상수·김이선·마경화·문희영·이명진(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2~201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제1장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다문화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울아카데미.

윤인진·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 : 143-191.

- 이영안(2020). 수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이혜경(2010). “한국 이민정책사” IOM 이민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No.2010-7.
- 전성훈·유수동(2021).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양시 결혼이민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5(3) : 1-20.
- 전성훈·오은지(2019). “고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고양시정연구원.
- 정장엽·정순관(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 121-142.
- 조석주·박지영(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영민·이기영·최현마·김정진(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최보연(2016).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건수(2012). “통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한국의 다문화 정책”, 『지식의
지평』, 13 : 64-88.
- 한승준(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42(3) : 463-486.

[해외문헌]

- Avtar Brah(1996). “Cartographies of diaspora”, NY: Routledge.
- Bhikhu Parekh(2007). “Multiculturalism In: Julian Baggini & Jeremy
Stangroom eds. What More Philosophers Think”, London: Sage,

130-135.

Brian H. Spitzberg(1991) "An examination of trait measure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Communication Reports』, 4 : 22-30.

Cape Breton Partnership.(2017). Presentation to the Municipality of the County of Inverness. Retrieved from:
<https://invernesscounty.ca/wp-content/uploads/2017/12/CB-Partnership-Immigration-Initiatives-Inverness.pdf> 2022.05.20.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in the Modern World 3ed", New York: Guilford Press.

Charles Taylor(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Multiculturalism :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s., Amy Gutmann(Princeton University Press).

Charles Taylor(2012). "Interculturalism or multiculturalism?",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38(4-5) : 413-423.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CIC).(2010). Evaluation of the Welcoming Communities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reports-statistics/evaluations/welcoming-communities-initiative.html> 2022.04.26.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CIC).(2014). Local Immigration Partnerships: Outcomes 2008-2013. Retrieved from
<http://p2pcanada.ca/files/2014/07/Local-Immigration-Partnerships-Outcomes-2008-2013.pdf> 2022.04.23.

Guo-Ming Chen & William J. Starosta(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The 86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Seattle, WA.
- Glass, E., & Sheffield, D.(2008). Best practices i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Library Settlement Program(LSP) Toronto Public Library. Proceedings from the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4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Quebec.
- Higgins, J.(1981). State of Welfare: Comparative Analysis in Social Policy. Oxford: Basil Black well and Martin Robertson.
- John W. Berry & Rudolf Kalin(1995). “Multicultural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An overview of the 1991 national surve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7(3) : 301-320.
- OECD.(2019).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9. OECD Publishing, Paris.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c3e35eec-en.pdf?expires=1580303322&id=id&accname=ocid177525&checksum=9768751848A7DE9FECB2BBA3F9AE9D13> 2022.05.20.
- Popple, P. & Leighninger, L.(2004). The Policy-Based Profession(3rd ed). Pearson Education Inc.
- Przeworski, A. & Teune, H.(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
- Rodgers, N. B., Doron, A., Jones, A. M.(1979). The Study of Social Policy: A Comparative Approach. UK: G. Allen & Unwin.
- Steven Vertovec(1996).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1) : 49-69.
- Will Kymlicka(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UK: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조사 설문지

1)고양시 시민 대상

2)고양시 공무원 대상

【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설문조사 】
(고양시 시민 대상)

2020년 12월

연구기관: 고양시정연구원

조사기관: 고양시정연구원

조사대상: 고양시 시민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산하 기관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민 여러분이 다문화사회와 외국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다문화에 관한 귀하의 생각과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평소의 생각과 느낌을 가감 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통계 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 항 목 | 내 용 | | | | |
|-----|---|-----------|-----------|-------|-----------|
| 성 별 | ① 남성 ② 여성 | 배우자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자녀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
| 연 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 | | | |
| 학 력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 | | | |
| 직 업 | ① 자영업 ② 생산·판매·서비스직 ③ 사무·관리직 ④ 주부 ⑤ 학생 ⑥ 공무원 ⑦ 무직 ⑧ 기타() | | | | |
| 거주지 | 고양시 (구) (동) | | | | |

[외국인주민과의 접근성 수준]

문1)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그렇다 | 아니다 |
|----------------------------------|-----|-----|
| ▣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 또는 지인이 있다. | | |
| ▣ 고양시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지 중에 외국인이 있다. | | |

[다문화수용성 수준]

문2)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 | | | | | |
| ▣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 | | | | | |
|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 | | | | | |
| ▣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옆집, 윗층, 아래층 등)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 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 | | | | | |
| ▣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 |
| ▣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 |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이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 원이나 고양시의회 의원, 대통령 후보, 고양시장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 | | | | |
| ▣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 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 | | | | | |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 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 | | | | | |
| ▣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 | | | | | |
|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 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 | | | | | |
| ▣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라 모여서 자 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 | | | | | |
| ▣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 | | | | | |
| ▣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 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 | | | | | |
| ▣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 | | | | | |

문3)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 | | | | | |
| ▣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 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 | | | | | |
|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 | | | | |
|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 적으로 따라야 한다 | | | | | | |
|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 | | | | | |
| ▣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 | | | | | |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 | | | | | |
| ▣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 | | | | | |
| ▣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 | | | | | |
| ▣ 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 | | | | | |
| ▣ 내가 현재 미혼이거나, 만약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 하겠다 | | | | | | |

문4)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 | | | | | |
| ▣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 | | | | | |
| ▣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 |
| ▣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 | | | | | |
| ▣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 | | | | | |
| ▣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 | | | | | |
| ▣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 | | | | | |
| ▣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 | | | | | |
| ▣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 | | | | | |

[다문화수용성 증대 경험]

문5)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그렇다 | 아니다 |
|---|-----|-----|
|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지금까지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
| <input type="checkbox"/> 귀하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함께 하는 취미, 문화, 스포츠 등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문6)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전혀 필요치 않다 |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필요 하다 | 매우 필요 하다 |
|---|-----------------|----------------|----------|----------|----------------|
|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이해 교육 | | | |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 | | | |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 | | | | | |
|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고양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 | | | | | |

【 고양시 다문화수용성 설문조사 】

(고양시 공무원 대상)

2022년 04월

연구기관: 고양시정연구원

조사기관: 고양시정연구원

조사대상: 고양시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산하 기관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정책 발굴 및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이 다문화사회와 외국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다문화에 관한 귀하의 생각과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평소의 생각과 느낌을 가감 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번호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8 |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 | | | | | |
| 9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 | | | | | |
| 10 | 이웃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 | | | | | |
| 11 |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 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 | | | | | |
| 12 | 나는 외국 이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라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치를 주겠다 | | | | | | |
| 13 |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 | | | | | |
| 14 |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 | | | | | |
| 15 |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외국 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 | | | | | |
| 16 | 한국인이 외국 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 | | | | | |
| 17 | 외국 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 | | | | | |
| 18 |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 | | | | |
| 19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 | | | | | |
| 20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 | | | | | |
| 21 |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 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 | | | | | |
| 22 |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 | | | | | |

| 번호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3 |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 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 | | | | | |
| 24 |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 | | | | | |
| 25 | 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 | | | | | |
| 26 | 내가 현재 미혼이거나, 만약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 하겠다 | | | | | | |
| 27 |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 | | | | | |
| 28 |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 | | | | | |
| 29 |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 |
| 30 |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 | | | | | |
| 31 |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 | | | | | |
| 32 |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 | | | | | |
| 33 |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 | | | | | |
| 34 |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 | | | | | |
| 35 |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저개발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 | | | | | |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Goyang City

Sunghun Jeon*, Bora Le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easure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in Goyang City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First, the provisions of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and ‘Responsibilities of Foreign Resident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Goyang City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

Second,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revise 「Goyang City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define the implementation of a win-win multicultural society based on interculturalism.

Third, ‘The basic plan for Foreign Residents’ should include policies to increase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Goyang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tinuou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in Goyang City.

Finally, Through Culture Arts Policy, it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between Goyang citizens and foreign residents repeatedly.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